

# EU Brief

| EU 동향 |

- 한국의 산업고도화를 위한 유럽과의 협력  
Korea-EU Industrial cooperation for upgrading value chain
- 새로운 국면을 맞은 유로존 위기  
Eurozone crisis entering a new phase?
- EU 주요국의 대중동 정책  
Middle East policy of EU member states
- 유로존 위기 전후의 중부유럽 FDI 유입 동향  
Central Europe's FDI inflow trend: before and after the Eurozone crisis
- 2013년 EU 광고산업의 3대 이슈  
Three key issues of EU advertising industry in 2013

 삼성경제연구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2동 1321-15번지  
삼성생명 서초타워 28층

Phone: 3780-8306

Fax: 3780-8009

[www.yonseri.org](http://www.yonseri.org)



EUROPEAN COMMISSION  
External Relations



Yonsei-SERI EU Centre

	<b>EU Focus</b> 한국의 산업고도화를 위한 유럽과의 협력 ..... 002 Korea-EU Industrial cooperation for upgrading value chain
	<b>EU Economy</b> 새로운 국면을 맞은 유로존 위기 ..... 004 Eurozone crisis entering a new phase?
	<b>EU Politics</b> EU 주요국의 대중동 정책 ..... 009 Middle East policy of EU member states
	<b>Trade &amp; Investment</b> 유로존 위기 전후의 중부유럽 FDI 유입 동향 ..... 013 Central Europe's FDI inflow trend: before and after the Eurozone crisis
	<b>Industry Trends</b> 2013년 EU 광고산업의 3대 이슈 ..... 016 Three key issues of EU advertising industry in 2013
	<b>EU Law</b>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EU의 규제 ..... 020 Multinational corporation's tax avoidance & EU's response
	<b>Social Issues</b>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성공비결 ..... 024 Factors behind Edinburgh festival's success
	<b>Report Review</b> EU의 글로벌 무역제한조치 평가 ..... 029 Tenth report on potentially trade-restrictive measures
	<b>EU Centre news</b> 온라인 원격 강의 ..... 031 Online Remote Lecture
	EU SME 포럼 ..... 031 EU SME Forum
	제20회 EU Core-Circle Society 세미나 ..... 032 The 20 <sup>th</sup> EU Core-Circle Society Seminar



# 한국의 산업고도화를 위한 유럽과의 협력

## Korea-EU Industrial cooperation for upgrading value chain

Determined to recover from the Lehman shock 5 years ago, the global economy, including the EU, is desperately searching for a new engine for economic growth and the keywords for this engine have been 'innovation' and 'cooperation'.

Europe has been proficient at innovation and one just needs to look at the history of European Union to appreciate the depth of their cooperation. In contrast, Korea's development model has reached its limit and it is thus necessary for Korea to benchmark the European model of sustainable growth. In other words, Korea can learn from Europe's R&D and vocational education policies to strengthen innovation and should consider the restructuring of global value chains to strengthen cooperation.

With the protraction of the Eurozone crisis, it may seem that Europe is losing its appeal as an export market; but it still remains as a repository of resources for industrial and economic growth. Europe's industry is highly developed and specialised, from which Korea should identify their strengths and use them as a source of future competitiveness.

Korea's industry, apart from a few global firms, remains reliant on the development model led by manufacturing and assembly. However, the proliferation of geographical division of production process and global value chains as well as the pressure on price competitiveness resulting from the rise of emerging countries have engendered the need to shift to a new development model, a model that puts emphasis on non-price competitiveness.

Germany's industrial competitiveness is usually in the limelight but attention should also be given to Britain's creative industry, France's aerospace and nuclear energy industry and Italy's fashion industry. Germany, by enhancing the quality of goods

and services of its traditionally strong industries - automobiles, machineries and chemicals - has managed to expand its exports substantially in the 2000s. France maintains comparative advantages in aerospace, pharmaceuticals, food, and luxury consumer goods and is coming up with measures to strengthen those sectors. The UK, despite undergoing acute de-industrialisation, has seen its creative industries blossom, a result of heavy investment in intangible assets.

Korea's industrial sector must now re-think what position it aims to take in the new global industrial landscape. That is to say, although Korea possesses a well-diversified portfolio at industry and product level, economic activity is unduly focused on the manufacturing and assembling aspect of industry and hence there is a pressing need to upgrade its value chain system.

The cooperation between Korea and Europe for value chain upgrading does not mean that the former should abandon the traditional strengths of its industry; rather, the direction of cooperation should be using those as the bases and expanding to R&D, innovation, design, marketing and branding. During this process, acquiring the knowhows that underpin the European innovation system is crucial. Therefore, close cooperation between Germany's automobile industry, Britain's creative economy, France's system industry and Korea's corresponding clusters is desirable.

Upgrading value chain requires directing one's efforts at new challenges, not carrying on with the ways of past. The EU's experience is there to help Korea reach a higher level. ★

Kye-hwan Kim, Senior Fellow, Korea Institute for Industrial Economics & Trade

유럽을 비롯한 세계 각국은 지금, 5년 전의 리먼쇼크에서 벗어나기 위해 새로운 성장엔진을 찾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추격형 경제성장의 한계에 직면한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 산업은 일부 세계적 기업을 제외하면 여전히 제조와 조립에 특화된 과거 발전모델의 연장선상에 있다. 한국 산업은 생산과정의 지리적 분할과 글로벌 가치사슬의 확산, 신흥국 산업의 부상에 따른 경쟁 압력 등으로 인해 새로운 발전 단계로의 이행을 요구받고 있다. 한국보다 유리한 가격경쟁력 여건을 갖고 있는 신흥국의 부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비가격 경쟁력에 초점을 맞춘 새로운 포지셔닝이 필요하다.

새로운 성장엔진을 모색하는 국가가 추구하는 성장 전략의 공통 키워드는 혁신과 협력이라 할 수 있다. 유럽은 오래전부터 혁신에 능통하였으며, 협력은 유럽통합의 역사로도 충분히 입증되고 있다. 유로존 위기가 장기화되면서 유럽이 수출시장으로서의 매력이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유럽은 한국 산업과 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한 자원의 보고라 할 수 있다. 유럽은 국가별 분업이 고도로 발전해 있으므로 분야별, 국가별 장점을 찾아내어 이를 한국 산업의 미래 경쟁력 원천으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즉, 혁신을 강화하기 위해 유럽의 R&D와 직업교육 정책을 배우고, 협력을 위해 글로벌 가치사슬(Global Value Chains)의 재구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유럽 국가 중 산업 경쟁력이 탁월한 독일뿐 아니라 영국의 창조산업, 프랑스의 우주항공, 원자력에너지 등 시스템 산업, 이탈리아의 의류 등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분야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자동차, 기계, 화학 산업에서 품질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한 결과, 비용 대비 품질을 개선하는 데 성공하여 2000년대 대규모 수출 확대의 성과를 거두었다. 프랑스는 우주항공, 의약, 식품, 고급 소비재 등에서 비교우위가 높는데,

이러한 장점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산업발전 전략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 영국은 유럽 주요국 중 탈산업화를 가장 빨리, 심하게 겪고 있는 나라임에도 창조산업의 발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무형자산에 대한 투자에 한해서는 독일이나 프랑스보다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한국 산업계는 글로벌 산업 지형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생존전략을 모색해야 한다. 국내기업들은 산업과 제품 수준에서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지만 각 산업의 제조 및 조립에 집중되어 있는 경제활동의 구조를 가치사슬의 상류와 하류 부문 중심으로 변화시키는 가치사슬 고도화(value chain upgrading)가 필요한 상황이다.

가치사슬 고도화를 위한 한국과 유럽 간 협력은 제조와 조립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 산업구조의 장점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R&D, 혁신, 디자인, 마케팅, 브랜딩으로 확장하는 방향이어야 한다. 유럽의 국가별 차별적 우위(differential advantages)를 한국의 차별적 우위와 결합하는 협력이야말로 보다 좋은 제품을 보다 저렴하게 제공하여 소비자 가치를 창조하는 방법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유럽 혁신시스템에 기반을 두는 지식과 노하우를 습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독일의 자동차 산업, 프랑스의 시스템 산업, 영국의 창조산업과 같이 유럽 주요국별 비교우위 산업과 한국의 관련 클러스터 간 협력이 긴요하다.

가치사슬 고도화를 위해서는 과거로부터 이어져온 전통적 방식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방식으로 도전하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이런 맥락에서 지난 반세기에 걸친 산업화 성과를 기반으로 새로운 단계로 도약하려는 한국경제에 있어 유럽과의 협력은 중요한 전략적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김계환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 새로운 국면을 맞은 유로존 위기

## Eurozone crisis entering a new phase?

This report, in its attempts to diagnose the current condition of Eurozone crisis, has measured the health of fiscally weak Eurozone economies by analysing 16 relevant indexes that represent fiscal, banking as well as real economic situation. The result shows that the real economy is the most vulnerable, with banking and fiscal situation following behind. The likelihood of fiscal crisis, owing to the implementation of fiscal backstop, the provision of bailout as well as the practice of fiscal consolidation, has decreased significantly and that of banking crisis too, albeit to a limited extent. The situation in the real economy has worsened for the fiscally stricken countries excluding Ireland and Italy and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shrinking private consumption from a credit crunch as well as rising unemployment. In conclusion, despite the improvement in the fiscal front, the banking and real economic crises remain intact and thus the Eurozone's conditions can be deemed not to have improved much in comparison with the inter-crisis period. The Eurozone crisis, in fact, is ongoing and it is premature to talk of its demise. In order to resolve the crisis, it is crucial to cut off the negative feedback loop between the banking and the real economic crisis. Three tasks, in particular, need to be completed as soon as possible: improving the health of fragile banking sector, resolving the Greek bailout issue, and having in place support measures for those whom the rescue packages have expired.

### 유로존 위기 해소의 낙관론이 대두

2009년 10월 그리스의 재정 불안에서 시작된 유로존 위기가 아일랜드, 포르투갈에 이어 스페인과 키프로스로 확산되면서 현재 4년째 지속되고 있다. 현재 유로존 위기는 재정위기(국가채무위기), 은행위기, 실물경제 위기가 상호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고 있다. EU와 IMF는 그리스를 포함한 유로존 4개국에 전면적 구제금융을, 스페인에 대해서는 은행부문에 대한 구제금융을 지원하고 있는데, 2013년 7월 말 현재

### ★ EU-IMF의 구제금융 지원현황(2013년 7월 말 기준)

대상국	승인 시점	지원 내용 (지원 금액)	지원 기간	지원 현황 (억 유로)
그리스	'10.5(1차)	전면적 지원 (1,100억 유로)	'10.5~'13.6	2,145
	'12.3(2차)	전면적 지원(1,300억 유로), 채무조정	'12.3~'14.12	
아일랜드	'10.12	전면적 지원 (675억 유로)	'10.12~'13.12	217
포르투갈	'11.5	전면적 지원 (780억 유로)	'11.5~'14.5	221
스페인	'12.7	은행부문 지원 (1,000억 유로)	'12.7~'13.12	413
키프로스	'13.3	전면적 지원(100억 유로), 채무조정	'13.5~'16.3	30

자료: EU 집행위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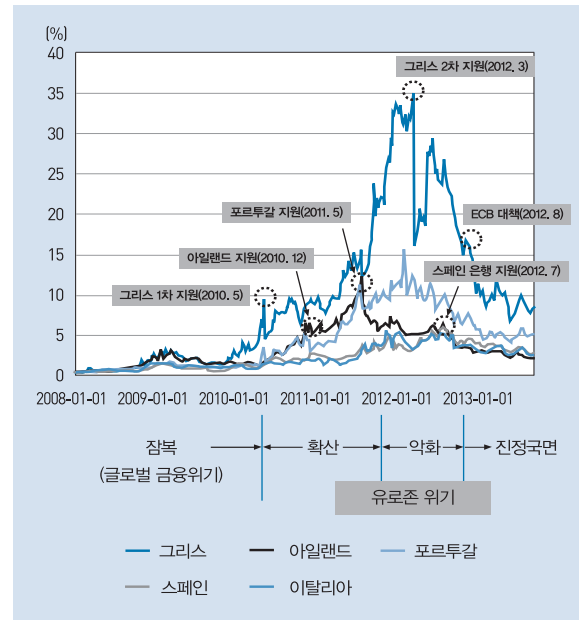
유로존 5개국에 대한 구제금융 지원프로그램(4,955억 유로)의 61% (3,026억 유로)가 집행된 상태다.

2012년 7월까지만 하더라도 유로존이 붕괴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세계경제와 글로벌 금융시장을 짓누르고 있었다. 하지만 이후 유로존 차원의 대응책<sup>1</sup>이 하나둘 나오면서 재정위기국들의 국채금리가 하락하고 주가가 상승하는 등 시장 내 불안이 점차 진정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위기가 끝났다는 낙관론마저 나오고 있다.

그러나 대내외 불안요인이 여전히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지난 5월 초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이 나오자 유로존 위기가 재연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현재 재정위기 5개국들(GIIPS)은 경기침체와 고용악화로 인해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EU와 IMF가 제공하는 3년 기한의 구제금융 지원프로그램이 아일랜드(2013년 말), 포르투갈(2014년 5월), 그리스(2014년 말) 순으로 점차

<sup>1</sup> 드라기 ECB 총재의 “유로존을 지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발언('12.7)과 ECB의 무제한 국채매입 정책(OMT) 발표('12.8)를 계기로 유로존 위기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완화되었으며, 그리스 구제금융 재개('12.8)와 유럽안정화기구(ESM) 출범('12.9)도 시장 안정에 기여

### ★ 국채금리(10년물) 추이로 본 유로존 위기



자료: Bloomberg; EU 집행위원회

종료될 예정이다. 구제금융 종료와 맞물려 4년째 지속되고 있는 유로존 위기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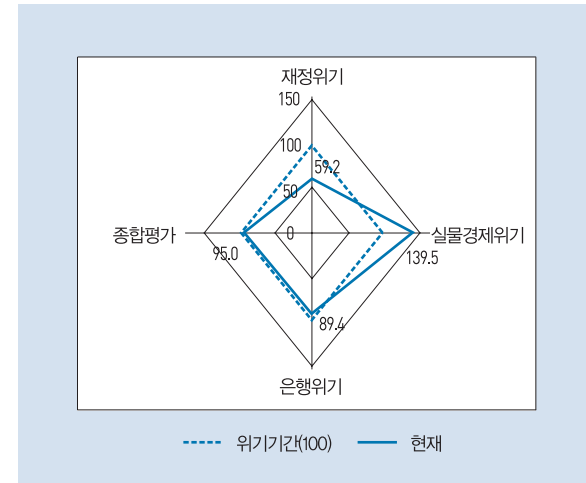
본고에서는 재정위기 5개국의 위기수준을 측정하여 구제금융 종료 가능성과 유로존 위기를 진단하고, 유로존 위기 해소의 당면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았다.

### 5개국 위기수준 측정 결과

유로존 위기를 진단하기 위해 유로존 위기를 구성하는 재정위기, 은행위기, 실물경제위기와 관련된 16개 지표<sup>2</sup>를 분석하여 5개국의 위기수준을 측정하였다. 재정위기 5개국의 위기수준을 종합한 결과, 실물경제위기>은행위기>재정위기 순으로 위기수준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sup>3</sup>

<sup>2</sup> 재정위기 관련 측정지표는 국채수익률, CDS 프리미엄, 재정수지, 정부부채, BIS가 집계하는 글로벌 은행들의 국채매입 등 5개, 은행위기 관련 지표는 무수익여신(NPL) 비율, 은행 해외차입, 타겟(Target)2 수치, BIS가 집계하는 글로벌 은행들의 은행대출, 가계부채 등 5개, 실물경제위기 관련 지표는 GDP 규모, 민간소비, 수출, 실업자 수, BIS가 집계하는 글로벌 은행들의 비은행 민간대출, 통화공급(M3) 등 6개

### ★ 재정위기 5개국의 위기수준 종합평가



재정위기는 방화벽 구축과 구제금융 지원, 재정긴축 등에 힘입어 크게 완화된 반면, 은행위기는 위기가간에 비해 소폭 개선되는 수준에 그쳤다. 실물경제위기는 아일랜드와 이탈리아를 제외한 3개국에서 모두 악화되었는데, 신용경색 심화로 민간소비가 위축되고 실업난이 가중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유로존 위기는 재정위기가 완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행위기와 실물경제위기가 여전해, 위기가간에 비해 크게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가별 위기수준을 비교해보면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아일랜드와 이탈리아의 위기수준은 2010년 6월~2012년 7월 위기가간에 비해 70%대 후반으로 가장 크게 완화되었으며, 그리스도 상황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포르투갈과 스페인은 은행위기와 실물경제위기가 진행중이어서 위기가간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아일랜드는 구제금융 지원이 예정대로 2013년 말에 종료될 수 있는 반면, 포르투갈은 쉽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

<sup>3</sup> 자세한 내용은 김득갑(2013), “유로존 위기 진단 및 당면과제” (SERI 경제 포커스 제428호), 삼성경제연구소를 참조



위기수준 진단 결과를 종합해보다면, 유로존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위기 해소를 거론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여겨진다. 치명적인 외상(재정위기)은 어느 정도 치유되었으나, 보다 깊은 내상(은행위기와 실물경제위기)을 치유하려면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유로존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은행위기와 실물경제위기 간의 연결고리를 차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은행부실 확대에 인한 신용경색의 심화가 실물경제 회복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 유로존 위기 해소를 위한 당면과제

유로존 위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당면과제를 서둘러 해결해야 한다. 당면과제를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할 경우 유로존 위기는 다시 악화될 수 있다.

첫 번째 당면과제는 유로존 위기의 근원인 은행 취약성을 개선하는 것이다. 실물경제의 본격적인 회복을 위해서는 은행 자본확충 및 구조조정을 통해 신용경색을 해소해야 한다. 재정위국들은 무수익여신(NPL) 비율이 10%를 상회할 정도로 은행부실이 심각하다.<sup>4</sup>

ECB와 유럽은행감독청(EBA)은 2014년 상반기까지 은행 자산실사(Asset Quality Review)와 스트레스 테스트를 완료한 이후 은행 자본확충 및 구조조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유로존 전체 은행(7,059개) 중 중요 은행으로 분류되는 130여 개 은행이 자산실사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들 은행이 전체 은행자산의 85%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정부재정과 실물경제에 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은행 자본확충과 구조조정을 질서 있게 추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ECB의 유동성 공급 확대는 물론 은행 구조조정에 필요한 선제적인 체제정비를 서둘러야 한다.

드라기 ECB 총재는 지난 9월 23일 유럽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필요하다면 3차 LTRO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다. 한편, 유럽안정화기구(ESM)의 은행부실 처리 지원 및 단일은행정리기구(SRM)에 대한 회원국 간 합의도 필요하다. 하지만 추가 재정부담에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독일의 반대로 은행동맹의 진전에 난항이 예상된다.

둘째는, 3차 그리스 구제금융 및 채무탕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그리스는 재정 악화로 3차 구제금융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경기침체 심화와 정부자산 매각 지연<sup>5</sup>등으로 2015년까지 100억~110억 유로의 재정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2014년 중반까지는 2차 구제금융 자금이 지원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3차 구제금융 지원프로그램에 IMF가 참여하려면 오는 11월까지 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트로이카<sup>6</sup>가 3차 구제금융의 전제조건으로 추가 긴축이나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요구할 경우 추가 긴축에 반대하는 그리스 정부와의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그리스의 정부부채 축소방안을 놓고 갈등이 재연될 소지가 높다는 점이다. IMF는 그리스 정부부채(3,225억 유로)의 약 60%를 보유하고 있는 유로존 국가들에게 GDP 대비 4% 정도의 채무탕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ECB와 독일은 다른 국가들과의 형평성 문제와 국내 여론 악화를 이유로 채무탕감에 반대하고 있다. 셋째는, 구제금융 지원이 종료되는 국가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 구제금융 종료 후에도 국채 발행을 통해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느냐가 구제금융 종료의 관건이다. 구제금융 종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포르투갈은 차치하더라도 구제금융 종료가 예상되는 아일랜드에 대해 세심한 지원책을 갖추어야 한다.

<sup>4</sup> 스페인의 무수익여신 비율은 2011년 1월 6.1%(1,108억 유로)에서 2013년 6월 11.6%(1,764억 유로)로 상승. IMF는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 은행들의 기업대출로 인한 잠재적 손실이 향후 2년간 2,500억 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

<sup>5</sup> 그리스 정부는 정부자산 매각과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2016년까지 500억 유로를 확보할 계획이었으나, 150억 유로로 대폭 축소했으며, 현재까지 50억 유로를 확보하는 데 그침

<sup>6</sup> 그리스 구제금융 지원 협상을 담당하는 EU 집행위원회, ECB, IMF를 지칭

구제금융 종료 후에도 안정적인 국채 발행이 가능하도록 선제적 신용대출(PCL)이나 은행 직접지원 등을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은행 자본확충과 구조조정으로 인한 위기 시나리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유럽 은행들의 재무 건전성이 매우 악화되었다. 인스트랜드영은 유로존 은행들이 9,180억 유로의 무수익여신을 보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KPMG는 유럽 은행들의 무수익여신 규모를 1조 5,000억 유로로 추정하고 있다. 유로존의 경기회복과 위기 해소를 위해서는 부실자산과 좀비은행들의 신속한 정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부 비관론자들은 은행 자본을 서둘러 확충하지 않을 경우 좀비은행들로 인해 유로존 경제가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수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유럽 국가들은 은행 자본확충을 위해 지금까지 EU GDP의 2.4%(총 2,880억 유로)에 이르는 정부재정을 투입했다. 그 결과 유로존 전체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은 2007년 말 66%에서 2013년 3월 말 92%로 급등했다. 이렇다 보니 재정위국들은 독자적인 은행 자본확충이 어려워 EU 차원의 재정 지원을 바라고 있다. 하지만 독일,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은 EU 차원의 재정 지원에 반대하고 있다.

#### ★ 재정위기 5개국의 정부부채 추이

구분	(단위: GDP 대비 %)	
	2007년 12월	2013년 3월
유로존	66	92
그리스	107	160
아일랜드	25	125
이탈리아	103	130
포르투갈	68	127
스페인	36	88

자료: Eurostat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6월 28일에 EU 재무장관들은 ‘은행 회생 및 정리 지침(BRRD: Bank Recovery and Resolution Directive)’에 최종 합의했다. 이 지침은 은행 구조조정 시 적용될 손실부담원칙(burden sharing scheme)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손실부담원칙의 핵심은 은행 회생 및 정리 과정에서 정부재정과 ESM의 구제금융자금 투입을 최소화하는 대신 민간투자자와 고액 예금자에게 우선적으로 손실을 부담하게 하는 것이다. 은행 구조조정 시 적용되는 손실부담 순서를 보면, 은행 주주와 채권 보유자가 손실을 제일 먼저 부담하고, 그 다음으로는 10만 유로 이상의 고액 예금자로서 대기업과 금융기관이 손실을 부담하게 된다. 그 이후에는 회원국 구조조정 기금과 회원국 정부(재정), 그리고 마지막으로 ESM이 손실을 떠안게 된다. 회원국 정부가 부실은행의 회생을 위해 지원에 나서려면 그 전에 주주 및 채권 보유자와 고액 예금자가 해당은행의 손실을 전체 부채의 8% 이상까지 떠안아야 한다. 이후에 은행들이 출연한 구조조정 기금을 통해 해당은행 부채의 최대 5%까지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민간투자자와 예금자의 1차 손실부담과 구조조정 기금 투입에도 불구하고 자본 부족으로 금융시스템의 불안이 우려될 경우, 민간투자자와 예금자에게 2차 손실을 부담하게 한 후 회원국 정부가 예금자 보호를 위해 재정을 투입하게 된다. ESM은 최종대부자로서 총 5,000억 유로 중 최대 600억 유로의 한도 내에서 엄격한 조건하에 은행 지원에 나설 수 있다. 이 지침은 2018년부터 공식 발효될 예정이지만, 손실부담원칙은 회원국 정부의 은행지원 지침이 시행되는 2014년부터 실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014년 상반기에 은행 자산실사와 스트레스 테스트가 실시되고, 이후 은행 자본확충 및 구조조정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손실부담원칙이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으로 추진될 은행 자본확충과 구조조정은 잠재적 불안요소를 안고 있다. 우선, 타국의 은행부실을 메우는 데 자국의 재정을 투입하는 것을 반대하는 북유럽

# EU 주요국의 대중동 정책

## Middle East policy of EU member states

Middle East policy of EU member states, in a broad sense, has a lot in common with the U.S and other countries: they wish to root out the source of terrorism, stem the spread of WMD, promote regional stability, ensure the stable supply of oil resources and prevent Islamic extremism. However, history shows that Europe has long maintained close ties with the Middle East, a level of which is not quite matched by the U.S and other countries. Therefore, when it comes to formulating and implementing the Middle East policies, there are subtle differences in priorities between EU member states and the U.S. The former, whilst sharing the concern for the above mentioned, is interested in preventing the spread of problems that originate from the Middle East - a legitimate concern considering its geographical proximity and the long history of immigration from the colonial past. Europe has traditionally, through the establishment of personal network, developed a deep understanding of the Middle East affairs and their policy thus involves engagement and participation, which is somewhat different from the U.S practice of unilateralism.

### 기본 입장

중동에 대한 EU 주요국의 기본적인 인식은 미국이나 여타 국제사회와 비슷하다. 테러의 근원 차단, 파괴 무기 대량 확산 금지 공조, 중동지역 내 평화 증진에 협력, 석유자원의 안정적 공급, 이슬람 극단주의 차단 등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역사적 맥락을 짚어보면 유럽과 중동, 두 지역은 미국 및 여타 국가에 비해 역사적 유대관계가 훨씬 깊다. 미국과 유럽의 대중동 정책을 비교해보면, 중동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우선순위의 미세한 차이가 존재한다.

EU 주요국은 중동에 대한 정책적 관심사를 미국과 공유하면서도 유럽과 중동의 지리적 인접성, 식민 역사를 통한 이주민 문제 등으로 인해 중동지역에서 발원하는 문제가 유럽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 더 큰 관심을 두고 있다. 전통적으로 유럽은 중동에 대한 역사적 이해와 인적 네트워크 등을 통해 현지의 사정을 경험적으로 이해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이 보여주었던 일방주의적 대중동 정책과는 달리, 좀 더 관여에 가까운 궤적을 보여왔다.

### 시기별 현황

#### [제1기 제국주의: 영국과 프랑스의 중동지역 장악]

20세기 초 중동과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한 EU의 양대 국가는 영국과 프랑스였다. 이 두 국가는 각기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며

중동지역 진출을 확대해나갔고, 제국주의적 행태를 보이며 중동지역을 양분했다.

제국을 경영하려던 영국에 있어 중동은 인도 및 동아시아로의 해상 진출로 확보 차원에서 중요한 지점이었다. 영국은 수에즈-홍해-바브 알 만테브 해협-아라비아 해로 이어지는 해상 연안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는 데 주력했다. 그리고 동시에 20세기 초, 영국 함대의 주요 동력이 석탄에서 석유로 전환되자 이란, 이라크 모술 지역 및 걸프 산유국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해나갔다.

프랑스는 영국과의 경쟁의식을 동인으로 영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있는 북아프리카 지역에 중점적으로 진출했다. 알제리, 튀니지, 모로코 등과 범불어권 연대를 추구하면서 지역 헤게모니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그리고 북아프리카뿐 아니라 레반트 지역으로도 활발하게 진출했다. 레바논의 베이루트와 파리 간의 유대 관계는 중세 이후부터 이어져온 바, 베이루트 및 베카벨리에 거주하는 마론파 기독교인들은 프랑스 문화와 역사를 동경했다.

1차 대전 종전 후 영국과 프랑스는 오토만 제국의 영토 재편 과정에 자국의 영향력을 유지하기 위해 개입했다. 상레모 조약과 로잔 조약을 통해 그레이트 시리아 지역(Levant)의 근대국가 수립을 자의적으로 확정했던 것이다.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는 중동지역의 뿌리 깊은 갈등은 당시 영국과 프랑스 간의 자의적인 국경 획정 때문이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글로벌 자금 이동을 예의주시해야 한다. 2013년 8월말 현재 유럽계 자본이 국내 외국인 포트폴리오 투자의 31.2%를 차지하고 있어, 유로존 위기 악화는 국내 금융시장 불안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한편, 기업들은 유로존 위기 해소 과정에서 비롯되는 사업 기회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 국내 금융기관과 기업들은 은행 자본확충 및 구조조정 과정에서 생겨날 M&A 기회를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자본확충 및 구조조정 압력에 직면한 유럽 은행들은 수년 내에 400~725개에 이르는 사업부를 매각할 것으로 예상된다.<sup>7</sup> ING의 국내 보험사업(ING생명) 매각이나 소시에테제너럴의 아시아 사업부 매각 추진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따라서 풍부한 자금력을 지닌 은행이나 기업들이라면 M&A를 경쟁력 제고의 기회로 활용해볼지하다. ★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연구전문위원

국가들로 인해 은행부실 규모가 크고 재정여력이 취약한 남유럽 국가들은 은행 자본확충 및 구조조정에 어려움을 겪을 소지가 크다. 이 과정에서 손실부담을 우려한 주주 및 채권 보유자들과 고액 예금자들이 은행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기 전에 보유 주식과 채권을 팔아치우거나 예금을 인출할 경우 은행들은 위기에 처할 수 있다.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유럽의 은행 구조조정과 맞물릴 경우 글로벌 자금이 유로존에서 대거 이탈할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경우 재무구조가 취약한 유럽 은행들은 유동성 부족문제에 직면할 것으로 우려된다. 만약 ECB의 선제적인 대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유로존은 2012년 상반기보다 더 심각한 은행위기에 처할 위험성이 높다.

### 유로존 위기 악화 대비와 M&A 기회 활용

지금까지 유로존 위기를 진단하고, 은행 자본확충 및 구조조정을 비롯한 당면과제들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이러한 과제들이 기업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인가?

유로존 위기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결코 낙관해서는 안 된다. 은행위기와 실물경제위기로 인해 다시 악화될 수 있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유로존 위기를 악화시킬 수 있는 대내외 불안요인들이 상존해 있다. 독일의 정책기조에 획기적인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그리스, 이탈리아 등 재정위기국들의 정국 불안과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향후 위기 해소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재정위기국들의 구제금융 종료, 은행 자본확충 및 구조조정에 차질을 초래해 유로존 위기가 악화된다면, 유로존은 자본이탈의 피해자인 동시에 신흥국 등 해외로부터 유럽계 자금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역할을 할 소지가 농후하다. 이것이 비록 발생 확률은 낮더라도 2014년에 가장 우려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기업들은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 움직임과 함께 유럽의 은행 구조조정과 관련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예상되는

<sup>7</sup> Beitel, P., Carvalho, P. & Branco, J. C. (2013.8.). What's next for the restructuring of Europe's banks? McKinsey & Company.



## [제2기 쇠퇴기: 냉전기 유럽의 영향력 약화]

2차 대전 발발과 종전 후 냉전체제로 전환되면서 진영에 기반한 국제정치질서가 형성되었다. 이에 중동지역에서 영국과 프랑스의 영향력이 점차 약화되고 진영의 양대 축인 미국과 소련의 영향력은 확대되기 시작했다. 미국과 소련의 구애 경쟁이 중동에 본격적으로 투사되자, 영국과 프랑스의 간섭에 대한 아랍 내부의 반발이 가시화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아랍 민족주의 노선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1952년 이집트 나셀의 등장은 영국과 프랑스에 큰 타격이 된다. 특히 이란 모사데크 사건과 수에즈 전쟁 등을 거치면서 반유럽 정서가 증폭되었고, 이에 따라 영국과 프랑스의 영향력은 급속도로 약화되었다.

## [제3기 혼돈기: 9·11과 새로운 안보문제 대두]

냉전 종식과 독일 통일은 기존의 진영론적 안보 위협과는 다른 새로운 안보 쟁점을 초래했다. ‘인간 안보’라 불리는 새로운 안보개념은 소비에트의 붕괴로 인한 동구권의 정치적 불안정성 확대, 실패국가의 증가로 인한 위협 증대, 유고 사태 등의 비극적 상황 발생, 난민 유입, 마약 및 총기 밀매, 종교적 극단주의 발호에 따른 유럽 내 이슬람 공동체의 불안정성 심화 등으로 발현되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EU 국가들은 미국과는 상이한 방법으로 중동에 다시 접근했다. 미국이 초강대국적 지위에서 군사력과 경제력을 동원해 중동을 관리하려 한 데 반해, EU 국가들은 소프트파워, 국제법, 다양한 층위의 거버넌스 등을 통해 대중동정책을 이어나가고자 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EU는 중동 내 다자간 협력구도 제도화를 추구하기 시작했다. EU-GCC 다이알로그 및 바르셀로나 선언(유럽-지중해 협력구상), ENP(European Neighbourhood Policy) 등을 통해 중동을 하나의 협력 블록으로 간주하고 접근했다. 2008년 사르코지 전 프랑스 대통령은 UfM(Union for the Mediterranean) 구상을 발표하면서 유럽, 북아프리카, 발칸반도, 아랍, 이스라엘을 포괄하는 거대 공동체 창설을 추진했다.

앞서 언급했듯 이러한 EU의 다자간 협력구도 노력과 미국의 독자적 중동정책 간에는 일정정도 간극이 발견된다. 특히 부시행정부의 등장, 9·11 테러와의 전쟁 등의 국면이 급박하게 전개되고, 부시 독트린에 의거한 미국의 전략은 유럽 주요국 노선과 상이한 측면이 있다. 또한 2003년 이라크 전쟁 개입을 둘러싸고, 당시 미국과 프랑스 간 갈등, 영국 내부의 논란, 스페인의 입장 변화 등이 복잡하게 맞물리기 시작했다.

## [제4기 탐색기: 아랍의 봄과 유럽]

중동에서 피로현상이 급증한 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1기의 대외전략으로 ‘아시아 재균형(pivot to Asia)’을 선언하면서 전략 재편을 추구했다. 그러나 중동에서 소위 아랍 정치변동이 급작스럽게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적절한 대응책을 구사하지 못하고 있다. EU는 ENP를 통해 기존 아랍 권위주의 정권과 협력하여 난민 유입을 막고, 기타 테러리즘 정보도 획득해왔으나 역시 급작스런 아랍의 정치변동으로 인해(특히 리비아) 신안보 위협을 제어해오던 파트너의 부재상태가 발생했다.

중동 개입을 꺼리는 미국과는 달리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으로 EU는 아랍 정치변동에 적극 개입했다. 리비아에 대한 ‘보호책임(R2P: responsibility to protect)’ 진행 과정과 최근 시리아 사태 등에서 양국 리더십의 적극적 행보가 주목된다.

## EU의 대중동 정책의 최근 주요 이슈

### [아랍의 봄 이후 민주주의 정착 프로그램 시도]

튀니지에서 발원한 정치변동이 이집트와 리비아를 거쳐 시리아로 확산되면서 테러리즘의 발호, 난민 유입, 유가 불안정 증대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EU 국가들은 긴장했다. 이에 EU는 중동 지역의 안정을 위해 새로운 프로그램 SPRING(Support for Partnership, Reform and Inclusive Growth)을 수립, 2012년 한 해 동안 3억 5,000만 유로를 투입했다.

특히 ENP의 내용 변화를 추구하여, 기존 권위주의 정부와의 관계 구축 및 우호 관계 유지라는 틀에서

벗어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구체적 지원과 이를 통한 정치발전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성격을 전환하고 있다. 유사한 맥락에서 최근 EED(European Endowment for Democracy)를 설립, 초기 2,200만 유로를 투입하는 등 중동지역 내 시민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에 나선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 [반테러리즘]

9·11 이후 미국이 주도적으로 견인했던 테러와의 전쟁(War on Terror)에 유럽 각국도 동참하여 테러세력 축출에 공조했다. 그러나 반테러전략은 내용 면에서 일정 부분 상이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을 전개하면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전쟁을 수행, 테러리즘을 지원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권위주의 독재체제 정권 교체(regime change)를 추구하였으나, 이로써 미국은 막대한 전비, 사상자 및 소프트파워의 상실을 초래했다.

EU는 IRA나 ETA 등의 경험을 통해 무력으로 저항세력 및 테러리즘을 발본색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오히려 압도적인 무력을 이용한 반테러전보다는 현지 대중들의 심정적 지지(hearts and mind)를 얻어내는 것이 관건이라 보았다. 테러세력이 기생할 만한 환경을 없애는 것이 더 구조적인 해법이라 인식했던 것이다.

EU는 반테러전략을 추진하기에 앞서 중동지역 내 만연한 정치적 박탈감, 경제적 피해, 사회 불균형 등의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정보수집활동 강화 및 공공외교 증진 등의 입체적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동시에 알 카에다나 기타 폭력적 테러 세력에 대한 직접적 궤멸 시도도 함께 진행했다. ‘아랍의 봄’ 이전에는 ENP가 통제하던 테러리스트 조직이 최근 불안정 국면에서 회생하는 조짐이 보임에 따라 EU 각국은 긴장을 늦추지 않고 있다.

### [이민 사회 및 난민 유입 문제]

EU와 중동 간의 관계에서 가장 큰 안보위협은 사실상 파괴무기 대량 확산이나 군비경쟁 등의 안보딜레마가 아니라 난민 문제다. 난민 유입은 단순히 일회적인

사안이 아니라 기존 유럽 내에 자리 잡은 이슬람권 이민 공동체와 연계되며 사회불안정성을 높이고 있다.

현재 EU 내 무슬림 인구는 1,500만 명에서 2,000만 명 내외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1950년대와 1960년대에 EU 내 노동력 부족으로 터키, 북아프리카, 파키스탄 등지에서 이주해왔다. 이들은 이전부터 잠재적 사회불안요소로 인식되어 왔는데, 최근 이슬람권 난민의 급증으로 불안정성이 더 심화되고 있다. 2013년 초의 시리아인 망명요청자는 2만 1,427명으로 망명요청자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이 바로 다음 순위이고 이들 중 3분의 1은 독일에서 수용하고 있으나 독일 정부는 시리아 기독교인에 한해 받아들이고 있다.

국제사회는 최근 중동과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생하는 난민문제에 각별히 신경쓰고 있다. EU는 최근 시리아 난민 문제 해결을 위해 5억 2,000만 달러의 예산을 추가 책정했다. 한편, 2013년 UNHCR 예산은 5억 9,300만 달러인데, 최근 난민 증가로 인해 추가 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유입된 난민들이 공동체의 성원으로 평화롭게 편입하지 못할 경우, 이들은 유럽 내 다양한 이슬람 이민 공동체와 연계될 것이다. 그리고 이들은 자칫 극단주의 저항세력으로 편입될 소지가 있어 EU 각국 정부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주요국의 입장

영국과 프랑스는 자국의 재정적자 및 세출감축조치에도 불구하고 아랍 불안정 국면에서 아랍 정치에 항상 적극 개입해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리비아 보호책임 발동과 최근 말리 사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적극개입은 일차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특히 프랑스는 EU 내에서 독일이 경제적 우위를 점하는 데 대하여, 자국은 정치적, 외교적인 리더십을 통해 자존심을 회복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영국 역시 알타체제의 산물인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 하나로 프랑스와 함께 유럽 과대대표 비판에 시달려온바, 이런 국제 안보 쟁점을 적극 주도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정치적 존재감을 드러내려 한 것으로 보인다.

# 유로존 위기 전후의 중부유럽 FDI 유입 동향

## Central Europe's FDI inflow trend: before and after the Eurozone crisis

According to UNCTAD, the inflow of global FDI decreased in 2009; it began to increase gradually since 2010; but has declined again in 2012. Similar trends can be found in the case of EU. This article focuses on three countries in Central Europe: Poland, Hungary and the Czech Republic. Prior to the 2009 global financial crisis, following its acceptance to the OECD, the NATO and the EU, Poland enjoyed large FDI inflows from Western European firms; it showed good track records through 2009~2011 with improvements of its economic fundamentals; but its inflows decreased significantly in 2012. After its entry into the EU in 2004, Hungary became the production base for Western European firms which resulted in large sums of FDI inflows and in turn boosted its economy. FDI inflows into the Czech Republic in the mid 2000s were hugely influential to its economy and foreign enterprises were responsible for 60% of exports, 50% of industrial production, and 40% of employment during this period. Following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ungary and the Czech Republic's FDI inflows plunged dramatically; but in 2012 showed signs of recovery.

### 중부유럽의 주요국인 폴란드, 헝가리, 체코

소비에트 사회주의체제가 붕괴되기 이전에 이념적으로 구분되었던 동유럽과 서유럽이 EU 확대를 통해 경제적으로 통합되었다. 동유럽 국가들은 지속적인 체제 개혁을 통해 시장경제체제로 완전 편입되었다. 물론 아직도 구조적 국가와 동유럽 국가를 체제전환국으로 분류하는 경우가 없지 않으나, 이는 다소 시대에 뒤떨어진 인식이라 할 수 있다.<sup>1</sup> 동유럽 국가들 중에서도 중부유럽에 위치해 있는 폴란드, 헝가리, 체코 3국의 경우, 과거에 동유럽 국가로 분류되었으나 이제는 OECD 회원국의 일원이 되어 서유럽에 준하는 국가로 인식되고 있다.

이들 중부유럽 3국은 1990년대 사회주의체제 붕괴 이후의 격변기를 거쳐 2000년대 초반에 EU 확대 과정<sup>2</sup>을

통해 높은 경제성장을 구가할 수 있었으나, 2000년대 후반 들어서는 서유럽의 경제위기로 인해 경제성장이 급격히 하락하는 등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부유럽 3국은 그동안 경제성장을 위해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에 주력해 왔는데, 외국자본이 경제성장 동력과 위기극복의 요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다. 이런 맥락에서 2009년 유로존 위기를 전후하여 중부유럽 3국의 FDI 유입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sup>3</sup>

### 중부유럽 3국의 FDI 유입 동향

UNCTAD에 따르면, 2009년에 FDI는 글로벌 금융 위기의 영향으로 전 세계적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하지만 2010년 이후 세계경제의 회복과 더불어 FDI도 점진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그러다 2012년에 유로존 재정위기가 악화되면서 글로벌 FDI가 또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는데, 대EU FDI도 유사한 패턴을 보였다.

중부유럽 3국은 2004년 EU 가입을 계기로 서유럽 기업들의 생산기지로 각광을 받으면서 FDI가 급증하였다. 그러나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해 FDI 유입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 중부유럽 3국의 경제성장률 추이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세계	5.4	2.8	-0.6	5.2	4.0	3.2
EU	3.4	0.5	-4.2	2.0	1.6	-0.2
폴란드	6.8	5.1	1.6	3.9	4.3	2.0
헝가리	0.1	0.7	-6.7	1.2	1.7	-1.7
체코	5.7	3.1	-4.5	2.5	1.9	-1.2

자료: IMF

<sup>1</sup> 유럽 국가를 서유럽, 동유럽, 남유럽, 북유럽 등으로 분류할 경우 EU 회원국은 대부분 서유럽과 북유럽에 위치해 있고, 남유럽과 동유럽에는 EU 회원국과 비회원국이 혼재해 있는 상황

<sup>2</sup> EU 확대 과정에서 2004년 5월과 2007년 1월에 중동부 유럽 12개국이 EU 회원국으로 편입되었으며, 최근에는 발칸반도 국가들의 EU 가입이 잇따름

<sup>3</sup> 최근의 유럽 재정위기는 2008년에 촉발되었으나 경기침체 및 투자부진을 동반한 경제위기가 EU 회원국 전역으로 심화된 것은 2009년부터였고, 동년 EU 회원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4.2%로 하락

### [프랑스]

프랑스는 전 사르코지 대통령 취임 이래, 현 올랑드 대통령에 이르기까지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중요성을 지속적으로 강조했으며, 실제로 적극 개입해왔다. 프랑스 대외정책 백서에는 아랍 무슬림권과의 관계가 프랑스 외교정책의 핵심임을 적시하고 있다. 프랑스의 대중동 외교 거점은 북아프리카 마그레브 지역이며, 이를 거점으로 시리아 및 레바논 등지에서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프랑스는 자국 중동외교의 핵심 기반이 ‘가치외교’임을 표방해왔다. 이에 따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문제 등에 있어서 대부분 팔레스타인 친화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친아랍 성향을 취함에 따라 이스라엘과는 일정 정도 대립각을 세우는 국면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자국 내 600만 명을 상회하는 이슬람권 커뮤니티의 불안정화 가능성을 고려한 측면이 있다. 사르코지는 재임 시 프랑스가 소위 앵글로색슨과는 다른 중동정책을 주도해야 한다는 기조를 천명하며 EMP(Euro-Mediterranean Programme)의 확대를 추구했고, 이러한 노선을 올랑드도 잇고 있으나 최근 아랍의 봄으로 인해 프랑스의 리더십이 구체적으로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

### [영국]

영국은 프랑스의 사르코지가 주창하고 있는 지중해 연합을 적극 지지하는 편은 아니다. 오히려 미국의 중동정책을 지지하지만 그렇다고 하드파워에 기반한 미국의 중동정책을 계속 추구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미국과 유럽의 미들맨 역할을 자임하려 한다. 중동에 대한 정치적, 안보적 움직임은 미국과 함께하는 반면, 경제협력 쟁점과 관련하여서는 프랑스와 함께하고 있다.

영국의 중동 내 주요 관심지역은 현재 걸프 산유국이다. 이들 산유왕정의 젊은 왕자들은 주로 영국에서 유학한다. 이를 통해 영국 내 주요 인사들과의 네트워크가 구축되고 있고 이는 영국의 중동 관여에 큰 자산이 되고 있다. 걸프 왕정의 외교전략 및 개발정책과

관련 영국출신 전문가들이 정책결정 과정을 독점한다는 비판이 고조되는 가운데, 여전히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움직임을 유지하고 있다.

### [독일]

독일은 국제무대에서의 자국의 정치적 지위를 감안해 중동정책에 있어서는 비교적 소극적으로 관여해왔다. 그러나 최근 들어 중동 및 아프리카 상품시장에 진출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를 나타내기 시작했다. 반테러, 원유의 안정적 공급, 난민 및 이민 문제 등 대중동 정책과 관련해서는 유럽의 일반적 시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비교적 보수적으로 움직이고 있으나, 나토 활동과 관련해서는 참여도를 점차 늘리고 있다. ★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





★ 중부유럽 3국의 FDI 유입 추이(Flow)

(단위: 억 달러)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세계	20,027	18,164	12,165	14,085	16,515	13,509
EU	8,591	5,453	3,590	3,794	4,416	2,585
폴란드	236	148	129	139	189	34
헝가리	40	63	20	22	58	135
체코	104	65	29	61	23	106

자료: UNCTAD

중부유럽 3국의 FDI 유입 동향을 살펴보면, 폴란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FDI가 지속적으로 유입되었다. 이는 폴란드가 OECD(1996년), NATO(1999년), EU(2004년)에 가입하면서 서유럽 내 대기업들의 투자가 대거 이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체코 및 슬로바키아와의 경쟁에서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생산법인의 유치에 실패함으로써<sup>4</sup> FDI 유입 규모가 과거에 비해 저조하였다. 2009년에는 EU 회원국 중 유일하게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는 등 경제 펀더멘털이 개선되어 2009년부터 2011년 동안은 FDI 유치 실적이 비교적 양호했다. 지난 20년간 최대 투자유치 산업은 제조업, 금융, 영업서비스 관련 분야이며,<sup>5</sup> 주요 투자국은 독일, 미국, 네덜란드, 프랑스 등이다.

헝가리도 1990년대 체제전환 단계를 거치면서 폴란드와 마찬가지로 민영화 작업 과정에서 FDI를 적극 유치했다. 독일,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미국, 프랑스가 주요 투자국이고, 헝가리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신재생에너지, 바이오, IT 서비스 등의 분야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다.<sup>6</sup> 2004년 헝가리의 EU 가입 이후에는 서유럽 기업들이 유로화 가치 상승에 따른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헝가리로 생산기지를 이전함으로써 FDI 누적 규모가 GDP의 3분의 1, 고용의 4분의 1

<sup>4</sup> 폴란드의 열악한 도로시스템, 관료주의 비대화, 임금상승 등 투자환경 악화로 인한 것임

<sup>5</sup> 2012년 연중 최대 투자기업은 프랑스텔레콤, EBRD, 피아트, 유니크레디트, 방코산탄데르 등

<sup>6</sup> 2012년 연중 최대 투자기업은 아우디, 레고, EER(Ethanol Europe Renewable) 등

이상을 점유하였다. 그러나 헝가리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9년 FDI가 급격히 줄어들었다.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체코로 유입된 FDI 누적 규모는 GDP의 10%에 달했다. 이에 힘입어 2000년대 중반 외국기업이 체코 수출의 60%, 산업생산의 50%, 고용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등 FDI가 체코 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었다.<sup>7</sup> 체코의 FDI 유입 규모는 2005년에 사상 최고치를 시현한 이후 2009년과 2011년에 각각 저점을 기록하다가 2012년에는 다시 급증했다. 국가별로는 독일, 미국, 오스트리아, 일본이 체코의 주요 투자국이며, 산업별로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sup>8</sup> 소프트웨어 및 IT 서비스, 금융이 체코의 최대 투자유치 산업이다. 최근에는 하이테크 및 R&D 분야에 대한 투자도 증가하고 있다.<sup>9</sup>

★ 중부유럽 3국의 FDI 유입 집중 분야

폴란드		헝가리		체코	
국가	산업	국가	산업	국가	산업
독일	제조업	독일	자동차	독일	자동차
미국	제조업·서비스	오스트리아	무역	미국	자동차 부품
네덜란드	금융	네덜란드	금융	오스트리아	신재생에너지
프랑스	도매·수선	미국	제조업·서비스	일본	금융
룩셈부르크	영업서비스	프랑스	통신	영국	통신

자료: PAIIIZ; Magyar Nemzeti Bank; CzechInvest; EIU

한국의 중부유럽에 대한 투자 평가

한국의 중부유럽 3국에 대한 FDI 규모는 저조한 편이다. 2013년 6월 말 현재 한국의 전체 FDI 규모는 잔액

<sup>7</sup> 체코가 EU에 가입한 2004년 이전에는 주로 국영기업의 민영화를 통해 외국 인투자를 유치했으나 EU 가입 이후에는 정치경제 안정, 무역장벽 철폐에 따른 시장접근 용이성 등이 매력적인 투자결정 요인으로 작용하여 체코에 대한 FDI가 제조업 중심으로 활기를 보였음

<sup>8</sup> 2003년부터 2012년까지 프로젝트 투자건수 기준으로 자동차 부품의 비중이 12%에 달함

<sup>9</sup> 2012년에는 도요타, 푸조, 현대, 폭스바겐, 포레시아 등 자동차 관련 외국기업이 투자를 주도

기준으로 총 2,263억 달러(신규법인 기준 5만 5,327건)이며, 이 중 10대 투자대상국은 미국(445억 달러), 중국(421억 달러), 홍콩(145억 달러), 영국(93억 달러), 베트남(88억 달러), 네덜란드(86억 달러), 캐나다(72억 달러), 인도네시아(69억 달러), 호주(68억 달러), 브라질(51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다. EU 회원국 중에는 영국(4위)과 네덜란드(6위)를 제외하고는 독일(38억 달러) 15위, 아일랜드(17억 달러) 26위, 프랑스(13억 달러) 29위, 폴란드(13억 달러) 30위, 슬로바키아(12억 달러) 32위, 체코(11억 달러) 33위, 벨기에(10억 달러) 34위, 스페인(8억 달러) 38위 등으로 조사되었다. 지역별로 보면 아시아 1,015억 달러(전체의 44.8%), 북미 518억 달러(22.9%), 유럽 386억 달러(17.1%), 중남미 189억 달러(8.3%)로, 한국의 FDI가 아시아 편중현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007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의 중부유럽 3국에 대한 FDI 추이(투자금액 기준)를 살펴보면, 폴란드는 2006년 2억 2,691만 달러로 급증했으나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헝가리는 2007년 1,538만 달러로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으나 글로벌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후 2010년에 1,377만 달러로 일시 증가했으나 다시 급격히 감소하여 2012년에는 49만 달러에 그쳤다. 체코는 2007년 5억 달러를 상회하여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2008년 이후 급격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편, 2013년 6월 말 현재 한국의 투자 누계 기준으로 3국을 비교해 보면, 폴란드 13억 3,265만 달러(141건), 헝가리 3억 7,389만 달러(71건), 체코 11억 462만 달러(54건)로, 폴란드가 상대적으로 큰 내수시장과 안정적인 경제성장을 바탕으로 한국기업들의 유치에 성공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기업들의 분야별 투자현황을 살펴보면, 전통적으로 폴란드에 수송기계(자동차), 전자통신장비, 석유화학 분야에서, 헝가리의 경우는 타이어, 모니터, 브라운관, 전자 및 정보통신 분야에서, 그리고 체코에

전자제품,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분야에서 투자가 집중되었다. 이는 한국기업들의 중부유럽 3국에 대한 투자가 주로 자동차와 전자산업에 집중되다보니 경쟁국들에 비해 투자의 다양성이 미흡함을 의미한다.

★ 한국의 중부유럽 3국에 대한 FDI 유입 추이(Flow)

(단위: 만 달러)

구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세계	2,230,179	2,388,306	2,038,156	2,436,621	2,649,083	2,316,398
폴란드	11,851	9,343	2,894	2,943	5,122	2,187
헝가리	1,538	280	774	1,377	128	49
체코	53,573	23,050	9,393	1,348	1,384	265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유로존의 재정위기는 중부유럽 3국에 대한 FDI 흐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유로존의 경기침체와 투자환경의 변화는 국내기업의 대EU 투자전략에 변화가 필요함을 뜻한다. 중부유럽 3국에 이미 진출해 있는 기업은 서유럽 시장에서의 가격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생산거점의 생산성 향상 등 효율성 제고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 한편 EU 시장 진출을 검토 중인 기업이라면 생산입지로서 중부유럽과 서유럽 국가를 철저히 비교 검토할 필요가 있다. 경제위기를 겪고 있는 남유럽 국가들이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외국기업 유치를 통한 제조업 육성에 적극 나설 채비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남유럽 국가들은 인건비 삭감과 복지비용 축소 등을 통해 원가경쟁력을 강화하는 한편 적극적인 투자유치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결과 생산입지 경쟁에서 남유럽 국가들과 중부유럽 국가들 간의 격차가 갈수록 좁혀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내기업들은 EU 회원국들 간에 전개되고 있는 투자유치 경쟁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

조양현 한국수출입은행 구미지역본부 본부장





# 2013년 EU 광고산업의 3大 이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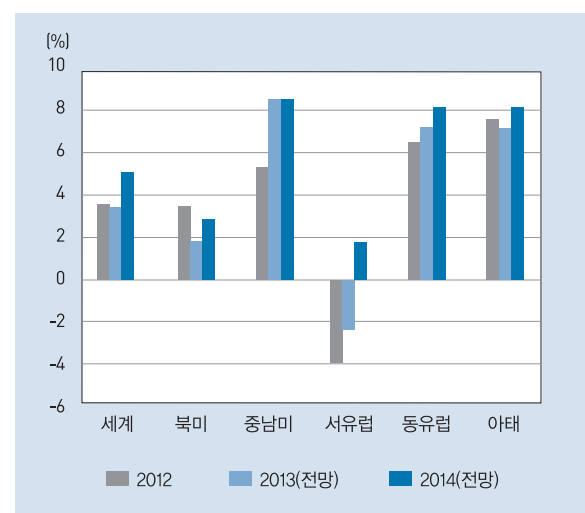
## Three key issues of EU advertising industry in 2013

With EU's sluggish growth continuing in 2013, many of EU firms are either reducing their advertising expenditure or increasing them only marginally. Global advertising expenditure in 1Q 2013 increased year-on-year by 1.9%, with Asia-Pacific and Latin America's advertising expenditure increasing 5.8% and 11.9%, respectively; in contrast, it decreased 4.4% in Europe. According to GroupM, not only did the advertising expenditure in Western Europe decrease 4.0% in 2012, but it is also projected to decrease 2.4% in 2013. In the face of the above, the EU advertising industry is undergoing some changes, in terms of management, strategy and medium. This article draws attention to some of the key issues. Firstly, large M&A deals are being pursued in order to gain competitive edge through economies of scale. Secondly, types of marketing which were unimaginable in the past is being pursued as a result of the fiscal crisis. Thirdly, despite the slump of advertising industry as a whole, online marketing has experienced strong growth and is becoming an important advertising medium.

### 침체된 EU 광고시장

EU는 2013년 2/4분기의 GDP 성장률이 전기 대비 0.4%에 불과했다. 이렇듯 저성장이 지속되며 많은 EU 기업들이 광고비용을 줄이거나 크게 늘리지 못하고 있다. 그나마 광고비용을 확대하고 있는 EU 기업들도 회복의 기미가 없는 자국보다는 중산층의 확대로 소비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신흥국에 투자를 집중하고 있다. 2013년 1/4분기 기준 전 세계 광고지출 규모가

### ★ 지역별 광고지출 증가율



자료: GroupM (2013.8.14.), GroupM revises global 2013 ad spending forecast downward to 3.4% growth, Press Release.

전년 대비 1.9% 증가하였는데, 아시아태평양(5.8%), 중남미(11.9%) 지역이 크게 기여했다.<sup>1</sup> 한편, 유럽에서는 광고지출 규모가 4.4% 감소하며 상반된 모습을 보였다. 그룹M<sup>2</sup>이 2013년 8월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서유럽의 광고지출 규모가 2012년 4.0% 감소한 데 이어 2013년에도 2.4%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제성장과 마케팅 지출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EU 광고계에서는 기업들이 경영, 전략, 매체 등 다양한 차원에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에 2013년에 EU 광고계에서 가장 주목을 받았던 이슈들을 경제상황과 연결해 소개하려고 한다.

첫째, 2013년 EU 광고산업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초대형 합병이 추진되고 있다. 프랑스의 퍼블리시스와 미국 옴니콤의 합병으로 퍼블리시스 옴니콤 그룹이 탄생할 계획이다. 둘째, 경영환경이 어려워 광고비용을 줄이려는 기업들과 어떤 방법으로든 세수를 확보하려는 EU 회원국 정부가 만나 과거에는 상상하기 힘들었던 마케팅 기법을 시험해보고 있다. 셋째, EU의 광고시장 침체 속에서도 온라인 마케팅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해나가며 기업들의 주요 광고매체로 부상하고 있다.

<sup>1</sup> The Nielsen Company (2013). Global AdView Pulse Quarter 1 2013.

<sup>2</sup> WPP 그룹에 소속된 미디어 투자관리 기업

### I. EU와 미국 광고회사의 초대형 합병 계획

2013년 7월 세계 3위 광고회사인 프랑스의 퍼블리시스와 세계 2위 광고회사인 미국의 옴니콤이 합병 계획을 발표했다. 합병을 통해 설립될 퍼블리시스 옴니콤 그룹은 매출 200억 달러 이상의 공룡기업으로 성장해 영국의 WPP를 제치고 세계 1위로 부상할 전망이다.

### ★ 2012년 세계 10대 광고회사

구분	기업명	본사 위치	2012년 매출(억 달러)
1	WPP	영국	165
2	옴니콤 그룹	미국	142
3	퍼블리시스 그룹	프랑스	85
4	인터퍼블릭 그룹	미국	70
5	덴쓰	일본	64
6	하바스	프랑스	23
7	하쿠호도	일본	22
8	얼라이언스데이터 시스템스 엔실론	미국	12
9	MDC 파트너스	미국·캐나다	11
10	엑스페리안	아일랜드	9

자료: Publicis Omnicom Group: All the Facts You Need to Know. (2013.7.28.), Advertising Age.

2014년 1/4분기까지 협상을 끝내는 것을 목표로 합병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퍼블리시스 주주들은 퍼블리시스 주식 한 주당 퍼블리시스 옴니콤 그룹의 주식 한 주를, 옴니콤 주주들은 옴니콤 주식 0.813주당 퍼블리시스 옴니콤 그룹의 주식 한 주를 받을 예정이다. 양사의 시가총액은 2013년 7월 말 기준 351억 달러였는데, 합병을 통해 양측 주주들은 퍼블리시스 옴니콤 그룹의 지분을 약 50%씩 소유하게 된다. 옴니콤의 매출액이 퍼블리시스보다 많지만 퍼블리시스의 이익률이 18%로 옴니콤의 15%보다 높아 가능한 협상이었다. 합병 이후 2년 반 동안은 퍼블리시스의 레비 CEO와 옴니콤의 렌 CEO가 공동으로 그룹을 운영하고, 이후에는 렌이 CEO 직책을, 레비가 회장직을 맡을 계획이다. 합병 이후 첫해에는 현재 옴니콤 회장인 그로포드가,

두 번째 해에는 현재 퍼블리시스 회장인 바딘터가 퍼블리시스 옴니콤 그룹의 회장직을 맡을 계획이다. 퍼블리시스 옴니콤 그룹의 본사는 세계 혜택을 제공하는 네덜란드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 경제의 저성장과 함께 광고시장이 침체된 가운데 퍼블리시스와 옴니콤은 합병을 통해 5년간 5억 달러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시너지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에 양사의 주요 투자자들은 합병 계획을 환영하는 분위기다.<sup>3</sup> 혁신과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광고계에서는 합병을 통한 규모의 경제 실현이 항상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구글 등 IT 업체의 부상과 빅데이터의 중요성을 고려하면 긍정적인 측면도 적지 않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퍼블리시스와 옴니콤 합병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도 있다. 영국의 『데일리 텔레그래프』紙는 미국과 프랑스의 기업 문화와 양사의 경영 스타일이 달라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으며, 렌 CEO가 단독으로 퍼블리시스 옴니콤 그룹을 운영하게 되면서 양사의 합병이 사실은 미국기업의 프랑스 기업 흡수였다는 인식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sup>4</sup> 또한 퍼블리시스와 옴니콤은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라이벌 기업들을 광고주로 갖고 있다. 예를 들어 옴니콤은 펄시를, 퍼블리시스는 코카콜라의 광고를 맡고 있다. 따라서 두 기업이 합병할 경우 고객 기업들은 내부 정보 및 전략이 라이벌 업체에 알려지는 것을 우려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광고회사들의 초대형 합병으로 발생하는 규모의 경제가 긍정적이었다는 분석이 나올 경우 영국의 WPP, 프랑스의 하바스, 아일랜드의 엑스페리안 등 여타 EU 광고기업들도 인수 합병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4개의 EU 기업, 4개의 미국기업이 포함되어 있는 10대 글로벌 광고회사 순위가 앞으로 어떻게 변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sup>3</sup> Top Omnicom shareholders welcome Publicis merger deal. (2013.7.31.), Financial Times.

<sup>4</sup> WPP Chief looks to exploit advertising rivals' merger. (2013.8.3.), Daily Telegraph.







## II. EU 재정위기와 새로운 마케팅 기법

최근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10년물 국채금리가 4%대로 하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EU 재정위기는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 EU의 실업률이 매달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회원국들은 재정긴축 정책을 추진하면서 실물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있다. 긴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저성장이 지속되면서 EU의 GDP 대비 정부부채 비율이 2012년 1/4분기 83.3%에서 2013년 1/4분기 85.9%로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EU 재정위기는 기업들의 마케팅 기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특히 스페인의 사례가 주목받고 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에 스페인 정부는 부동산 붐과 경제호황에 힘입어 안정적으로 세수를 확보할 수 있었고, 당시 인프라 및 사회복지제도 관련 지출을 확대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락하자 스페인 정부는 세수 마련이 힘들어졌고, 동시에 사회복지지출이 늘어나며 정부재정이 빠른 속도로 악화되었다. 특히 부동산 시장 호황에 과도하게 의존한 스페인의 자치정부가 재정위기의 주범으로 지적받았다. 스페인 17개 자치정부의 부채는 2002년 1/4분기 435억 유로에서 2009년 1/4분기 910억 유로로 약 두 배 확대되었고, 이후 부동산 시장 침체로 재정상황과 경기가 급격히 악화되자 자치정부의 부채는 2013년 2/4분기 1,933억 유로까지 확대되었다. 이는 스페인 GDP 대비 무려 18.9%에 달하는 규모다. 결국 2012년 9월 스페인 중앙정부는 180억 유로의 유동성펀드를 설립해 재정적으로 어려운 자치정부에 자금을 지원하였고, 강력한 재정긴축을 요청하였다.

EU의 기업들은 시장 침체로 인해 마케팅 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재정적으로 어려운 EU 회원국 정부와 협력해 효과적인 광고 기법을 모색하고 있다.<sup>5</sup> 2013년 5월 스페인 카탈루냐 지방의 바르셀로나 시 정부는 나이키와 광고 계약을 맺고 11만 4,000유로를 받았다. 바르셀로나 중심가인 람블라스 거리에 위치한 60미터 높이의 콜럼버스 동상에 나이키 축구 유니폼을



자료: Reuters, Bloomberg

입히는 계약을 맺은 것이다. 이 동상은 1888년 바르셀로나 만국박람회 때 세워진 것으로, 시의 상징 같은 존재이지만 자치정부는 재정 확보를 위해 랜드마크를 활용하기로 결정했다. 나이키에 따르면 700만~800만 유로의 광고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2013년 6월에는 한국의 서울역에 해당하는 마드리드의 솔 광장역 이름을 보다폰-솔(Vodafone Sol)역으로 개명했다. 영국의 보다폰은 앞으로 3년간 이 이름을 쓰는 조건으로 300만 유로를 자치정부에 지급하였다. 더불어 2013년 9월부터는 마드리드 지하철 2호선을 보다폰의 이름을 따 보다폰 2호선으로 부르기로 했다. 유럽 전역을 통틀어 지하철 노선에 기업 이름이 들어가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지하철 운영사인 메트로 드 마드리드는 자치정부의 재정이 어렵기 때문에 보다폰으로부터 받는 자금을 공공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U 회원국 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이와 같은 획기적인 마케팅 방법은 당분간 계속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마케팅 기법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공공의 랜드마크를 민간기업 특히 미국 등 비EU 기업이 돈을 앞세워 마케팅에 사용할 경우 기업의 이미지가 오히려 악화될 소지가 있다.

따라서 EU 진출 기업들은 현재 상황을 기회로 활용하는 한편, 민감한 현지 정서를 충분히 이해한 후 마케팅 전략을 구사해야 한다.

## III. EU 온라인 광고시장의 약진

EU의 광고계가 전체적으로 침체된 상황에서도 온라인 광고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유럽인터넷광고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유럽의 온라인 광고시장<sup>6</sup>은 연평균 17.2% 성장하며 2012년 243억 유로 규모가 되었다. 2012년 유럽의 전체 광고시장은 마이너스 성장을 보인 반면, 온라인 광고시장은 11.5% 성장하며 신문을 제치고 TV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광고매체로 부상했다.<sup>7</sup> 기업들이 유럽 내 전체 광고 예산 중 온라인 광고에 투입하는 비중은 2006년 10.3%에서 2009년 19.0%, 2012년 25.6%로 증가했다. 온라인 광고시장 부문별로는 2012년에 서치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안내 광고가 각각 15.5%, 8.9%, 6.3% 성장했다. 또한 각각의 시장 규모는 119억 유로, 79억 유로, 45억 유로를 기록했다.

### ★ 2012년 유럽의 10대 온라인 광고시장

구분	국가	규모(억 유로)	비중(%)	성장률(%)
1	영국	66.4	27.3	13.3
2	독일	45.6	18.8	8.6
3	프랑스	27.7	11.4	6.3
4	러시아(비EU)	15.4	6.3	34.0
5	이탈리아	14.2	5.8	9.2
6	네덜란드	12.1	5.0	8.1
7	스페인	9.2	3.8	-0.6
8	스웨덴	8.4	3.5	20.0
9	노르웨이(비EU)	6.2	2.5	5.8
10	덴마크	5.9	2.4	12.5
기타 16개국		32.0	13.2	13.0
유럽 26개국		243.1	100.0	11.5

자료: IAB Europe & IHS (2013), Adex benchmark 2012: European online advertising expenditure.

<sup>6</sup> 21개의 EU 회원국과 5개 비EU 국가

<sup>7</sup> 유럽인터넷광고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유럽의 TV 광고시장은 281억 달러, 신문 광고시장은 193억 달러, 잡지 광고시장은 87억 달러

제품별로는 맥킨지가 유럽 소비자들의 온라인 구매 비중을 분석해본 결과, 5개 제품군은 이미 온라인 중심으로 변모하였고, 6개 제품군에서는 온라인화가 시작되었으며, 2개 제품군은 아직도 오프라인 중심인 것으로 나타났다.

### ★ 유럽 소비시장의 온라인화 현황

구분	소비시장
온라인 중심	컴퓨터 하드웨어 · 소프트웨어, DVD · 비디오, 전자제품, 비디오게임, 책
온라인화 시작	옷, 화장품, 가구, 신발, 인테리어, 사무용품
오프라인 중심	가정용품, 식료품

자료: Meffert, J. et al. (2013), iConsumers: Life online, McKinsey & Company.

최근 유럽에서 온라인 광고시장이 성장하게 된 배경은 기업들의 마케팅 예산이 줄어들면서 CPC(cost per click)를 통해 광고 효율성을 쉽게 비교할 수 있는 서치 광고를 선호하게 된 데 있다. 그리고 경기침체로 소비자들이 집안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는 소위 코쿠닝 현상이 심화되었고, 집안에서 온라인으로 가격을 비교해 물건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이 많아지면서 온라인 광고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것이다. 향후에도 유럽에서 마케팅의 온라인화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들은 소비자와 소통할 수 있는 채널을 다각화하고,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온라인 소비자들의 성향을 파악해야 한다.

### 저성장 지속에도 많은 변화가 예상

EU 경제의 저성장과 이에 따른 소비시장 침체가 지속되면서 광고시장에서는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요 기관들은 EU의 광고시장이 2014년부터 플러스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2013년에 EU 광고산업에서 나타난 3대 이슈 즉 기업의 대규모 합병, 새로운 마케팅 기법 도입, 온라인 광고시장 성장이 향후 트렌드로 자리 잡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들은 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

김경훈 삼성경제연구소 선임연구원

<sup>5</sup> Advertising spreads onto landmarks in crisis-hit Spain. (2013.6.24.). Reuters.







#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와 EU의 규제

## Multinational corporation's tax avoidance & EU's response

EU member states have experienced numerous difficulties as tax revenues declined, welfare spending increased and economic growth slowed down in the aftermath of 2008 global financial crisis. They are now considering various measures to increase tax revenues. Taking strict measures to address tax evasion and avoidance is considered important in ensuring economic recovery as well as transparency. The EU has stressed the importance of practicing transparent governance at numerous events in 2013 such as the EU Summit in May, the G8 Summit in June and the G20 Summit in September. Recently, a number of multinational corporations have been found to take strategic measures to reduce their taxable income and this has further strengthened the EU's desire to tackle tax avoidance.

### EU의 조세 투명성 강화 배경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세수 감소, 재정 수요 증가, 저성장 지속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EU 회원국 정부는 세원을 추가 확보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중에서 특히, 탈세와 조세회피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경기회복은 물론 조세형평성 확보 차원에서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조세 투명성 강화에 대한 EU의 일관된 입장은 2013년 5월에 열린 EU 정상회의, 6월의 G8 정상회담, 그리고 9월의 G20 정상회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최근에는 구글, 애플 등 다국적 기업들이 공격적인 절세 기법을 동원하여 수익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세금을 부담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 방안들이 더욱 심도 깊게 논의되고 있다.

EU 회원국들이 탈세 및 조세회피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로 한 것은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세수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재정위기로 인한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EU 회원국들은 조세수입 감소 및 지출 증대라는 재정악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그리스에서 촉발된 유럽 재정위기로 인해 EU 회원국들은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지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단기간에 경기가 회복될 가능성도 매우 낮은 상황이다. EU는 2013년에도 마이너스 성장을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이러한 상황은 EU 각국의 조세수입에도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이 뚜렷한 경기회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EU의 각국 정부는 조세수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부가세율을 인상하였다. 그 결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향 추세에 있던 EU 회원국들의 소득세율과 부가가치세율은 상승세로 전환되었고, 이로 인하여 EU 역내 및 역외에서 탈세와 조세회피에 대한 유인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 되었다. 일례로 소득세율은 EU 회원국들이 자발적으로 결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국가 간 편차가 크며 결과적으로 회원국 간 세율 차이에 따른 탈세 및 조세회피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된 것이다.<sup>1</sup> EU 각국 정부는 당초 세수 확보를 위하여 부유층을 대상으로 소득세를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였으나, 이러한 방안은 사회적 혼란만 초래한 채 구체적인 성과 달성에 실패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sup>2</sup> EU 역내를 기준으로 약 1조 9,000억 유로로 추정되는 지하경제를 축소하여 재정건전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제기되었으나, 유럽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지하경제의 규모가 상이하며 해당 지역의 고유한 사정으로 인해

<sup>1</sup> 개인소득세율은 2013년 기준으로 스웨덴이 56.6%로 가장 높은 반면, 불가리아는 10.0%로 가장 낮아 세율 차이가 46.6%p에 달함. 법인세율은 프랑스가 36.1%로 가장 높은 반면, 불가리아와 키프로스는 10.0%에 불과해 프랑스와 26.1%p의 세율 차이가 발생  
<sup>2</sup> 프랑스 정부가 소득세율을 75%까지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자 LVMH의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 영화배우 제라르 드파르디외 등이 프랑스 국적을 포기하였으며, 동 방안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는 등 논란이 가중

지하경제를 단기간에 일률적으로 규제하기 곤란하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다.<sup>3</sup>

부유세 도입 방안이나 지하경제 양성화 등의 세원 확보 방안이 실행 단계에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음에 따라 EU 회원국들이 최근에는 불법자금의 온상으로 지목되고 있는 조세피난처의 정보를 공개하고 다국적 기업들의 과도한 조세회피를 차단하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EU는 다국적 기업들의 역외 조세회피를 규제하는 한편, 비회원국들에 대해서는 은행 비밀주의를 더 이상 허용하지 않고 예외 없이 금융거래 정보를 공유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은행 비밀주의에 대한 정보 공유 요청은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대한 규제 강화와 더불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 사례

최근 구글과 스타벅스, 아마존 등 다국적 기업들이 유럽에서 엄청난 이익을 올리면서도 수익을 세금이 낮은 지역의 법인에 몰아주는 방식으로 조세를 회피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sup>4</sup> 이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조세회피지역과 기존에 체결한 이중 과세 방지협정을 폐기해 지나치게 적은 세금을 낸 기업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국적 기업의 국가별 납세자료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안도 추진하고 있다. EU의 이러한 움직임은 G8 정상회담과 G20 정상회의에서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다국적 기업들의 탈세를 막기 위한 공조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기로 합의하면서, (i) 국가별 세금정보의 자동교환, (ii) 조세회피 목적의 수익 이전 행위 차단을 위한 세제 보완,

(iii) 기업의 소유 및 수익 구조에 관한 투명성 제고 방안 등의 조세정의 구현 과제를 설정한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는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애플과 구글은 지식재산권 거래에서 창출한 수익 대부분을 저세율 국가로 이전하는 방식으로 절세를 하였다. 1990년대 후반 생산시설이 폐쇄된 후 애플의 아일랜드 법인이 서류상의 지주회사로만 존속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애플은 특허권 사용료 등 지식재산권 수익을 자사 아일랜드 법인으로 이전하여 1,000억 달러 규모의 현금성 자산을 비축하였다. 애플의 아일랜드 법인은 각국의 세법상 맹점을 활용하여 해외에서 거둔 수익 740억 달러 중 2%만을 세금으로 납부하였다. 구글은 광고 검색 등에서 창출한 수익을 특허권 사용료라는 명목으로 아일랜드 소재 자회사에 이전하는 방식을 활용하여 세금을 크게 줄였다.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sup>5</sup>로 불리는 구글의 절세 기법은 수백 개의 다국적 기업들이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조세회피 방식을 통해 구글은 2011년 영국에서 32억 파운드의 수익을 올렸음에도 법인세로 단 600만 파운드만 납부했다.

또한 아마존과 스타벅스는 의도적으로 적자를 기록하는 방법으로 법인세 납부를 회피하였다. 영국 스타벅스는 네덜란드의 유럽 본부에 로열티를, 스위스의 계열사에 커피 구매료를 지급하여 의도적으로 적자를 기록함으로써 영국에서 3년간 법인세를 납부하지 않았다. 스타벅스는 14년간 영국에서의 매출액이

<sup>5</sup> 'Double Irish with a Dutch Sandwich'라는 조세회피 기법은 아일랜드 회사 두 곳과 네덜란드 회사 한 곳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우선 아일랜드 법인을 설립한 후 여기에 다국적 기업의 수입, 특히 지적재산권 관련 수익을 송금함. 그리고 나서 아일랜드 밖, 특히 조세피난처인 버뮤다나 버진 아일랜드 등에 있는 아일랜드 법인으로 돈을 송금하는데, 이 과정에서 법인세율이 낮은 네덜란드 법인을 중간에 포함시킨, 네덜란드 법인을 통해 모은 돈은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아일랜드 법인의 자회사로 이전시키며, 아일랜드의 속지주의 조세 원칙에 따라 조세피난처에 세워진 아일랜드 법인의 자회사는 본사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됨

<sup>3</sup> 유럽 내에서도 동유럽(24.6%)과 남유럽(22.5%)의 GDP 대비 지하경제 비중이 북유럽(13.7%)과 서유럽(11.1%)보다 상대적으로 높음. 동유럽과 남유럽의 국가들에서 지하경제가 만연한 이유는 시장개혁 이전에 이미 부패 존재, 통계에 잡히지 않는 현금거래의 보편화, 상호부조 등 지하경제 활동으로 저소득층의 실질적인 피해가 경감되었기 때문임

<sup>4</sup> "EU, 다국적 기업·조세회피처 부당 세금거래 의혹 조사." (2013. 9. 12.). 「서울경제」.





31억 파운드에 달했으나, 같은 기간 동안 법인세 납부액은 860만 파운드에 불과했다. 아마존은 공격적인 가격 정책으로 매출을 극대화하면서도 수익을 내지 않는 방식을 통해 세금 부담을 최소화하고, 시장 지배력을 강화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아마존의 매출은 2012년에 전년 대비 40% 증가하였으나 오히려 3,900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여 법인세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아마존은 이미 2007년 영국에서의 사업 부문을 세율이 낮은 룩셈부르크로 이전하여 영국 내에서 과세를 회피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었다. 이러한 절세 기법을 활용한 결과, 다국적 기업들은 EU에서 매출액 대비 0.1% 내외의 세금만 부담하고 있다.

#### ★ 주요국의 법정 법인세 현황

국가	세율(%)
미국	35.0
프랑스	33.3
일본	28.1
영국	23.0
독일	15.8
아일랜드	12.5
버뮤다	0.0

주: 사례별로 적용된 최고 한계세율

#### EU의 조세회피 규제 방안

유럽 지역에서 수익을 창출한 다국적 기업들이 납세를 회피하는 행태에 대하여 EU 회원국들은 탈세 및 조세회피에 관한 실행계획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합의하였다. EU 집행위원회는 2012년 12월 탈세 및 조세회피에 관한 실행계획을 발표하였으며, 2013년 5월 EU 정상회의에서는 금융정보 공개에 관하여 EU 회원국 정상들 간의 합의가 이루어졌다.

EU 정상회의에서는 2013년 말까지 역내 은행 계좌정보 자동교환제도를 도입하여 은행 비밀주의를 개혁하고 금융거래 정보를 국가 간에 교환하기로 합의하였다. 오스트리아와 룩셈부르크는 그동안 금융정보 공개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으나, EU 정상회의 전 이를 철회하고 은행 계좌정보 공유범위를 확대할 것임을 약속하였다. 이에 따라 연내에 은행 계좌정보 자동교환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독일, 프랑스, 영국, 이탈리아, 스페인 5개국은 2013년 4월 탈세방지를 위한 은행 계좌정보 상호교환에 합의하였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EU 이사회에 스위스, 리히텐슈타인, 모나코, 안도라, 산마리노 등 비회원국들과 은행 계좌정보 교환협상을 위한 권한을 인정해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EU 정상회의를 통해 EU 집행위원회가 협상권한을 인정받게 되었다. 2013년 6월의 G8 정상회담과 9월의 G20 정상회의에서도 탈세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하여 국가들 간에 조세정보를 공유하고 조세 투명성 확대를 위한 국제 규범을 수립하는 과제를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G20 정상회의에서는 국가 간 조세정보의 자동교환을 확대하기 위한 국제모델을 2014년까지 OECD를 중심으로 개발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외에도 각국은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가 간 협력도 확대하고 있다. 독일 정부는 스위스 정부와의 은행 계좌정보 제공 협정을 통해 스위스에 은닉해놓은 독일인 재산에 대한 과세를 추진하고 있으며, 프랑스 등 유럽 주요 국가들과 탈세 방지를 위한 은행 계좌정보 상호교환에 합의하였다. 영국은 2011년 12월 스위스와 역외탈세방지조약을 체결하는 한편, 국세청의 조세회피 추적 기능을 강화하고 조세회피 기업의 공공입찰 참여를 금지하였다. 미국은 실제로 2009년 스위스의 UBS 은행을 상대로 미국인 고객 명단 제출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UBS는 4,000여 명의 계좌정보를 제공하고 7억 8,000만 달러의 벌금을 납부하기로 합의하였다. 더 나아가 외국 금융기관이 미국인 보유 계좌정보를

미국 국세청에 직접 통보하도록 하는 ‘해외 금융기관 계좌신고제(Foreign Account Tax Compliance Act)’를 도입하였다. 외국 금융기관이 정보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계좌신고제에 따라 해당 금융기관은 미국에서 얻는 금융 수익의 30%를 벌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국가 간 금융거래 정보 공유 확대와 은행 비밀주의를 유지하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 압력이 강화됨에 따라 조세회피에 대한 과세 범위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EU 집행위원회는 EU 역외 국가들의 느슨한 금융 규제 및 조세 기준으로 인해 회원국들의 재정수입이 침해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지나치게 낮은 세율 또는 0%의 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유해한 조세경쟁을 하고 있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수준에서 최소한의 국제적인 조세 기준<sup>6</sup>을 마련하도록 요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책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또한 EU 집행위원회는 조세피난처 등 특정 국가에 자회사를 설립하고 이를 통해 낮은 세금을 납부하는 다국적 기업들의 행태와 관련하여, 어떠한 국가에서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이중비과세 현상’을 방지하고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국가에서 세금 납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다국적 기업의 역외 수익 이전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서 국가별 납세 자료를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나아가 EU 집행위원회는 법인세 정보교환을 거부하는 국가들을 조세회피지역으로 지정하고, 이들 국가를 자주 이용하는 기업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하여 이들 기업들에 대해서는 남용 금지조항(General Anti-Abuse Rule)을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장기적으로는 조세피난처로 알려진 국가들과

체결한 이중 과세 방지협정을 폐기하여 지나치게 세금을 적게 낸 기업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과세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다국적 기업들은 법적 의무 이행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EU 회원국들은 세수 확보를 위해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회피에 대해 지속적으로 규제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조세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제공조가 필요한데, EU 회원국들 사이에서만 아니라 역외 국가들과의 국제 공조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국적 기업들의 공격적 절세 기법에 대한 비난 여론에 힘입어 각국 정부는 조세회피 방지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들은 국제 거래상 법적 의무 이행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또한 다국적 기업의 조세회피는 법적 책임을 부담할 위험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기업 평판에도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 스타벅스가 영국에서 조세를 회피하고자 했던 움직임이 알려지자 불매운동이 벌어졌고, 결국 자발적으로 법인세를 납부하게 되었다. 아마존과 구글도 관련 국가들에서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은 복지예산의 증가로 인해 재정악화 상황에 처해 있는 정부가 역외탈세, 대법인·대재산가, 고소득 자영업자, 민생침해사범 등의 지능적인 탈세·탈루 사범을 지하경제 양성화의 4대 분야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인 바, 합법적 절세 행위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 등에 힘입어 불필요한 오해와 비판이 제기될 수 있으므로 기업들은 이에 대해 대비책을 마련해두어야 한다. ★

백대용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sup>6</sup> EU 집행위원회는 최소한의 국제적 조세 기준을 판단함에 있어, (i) 조세혜택이 비거주자에게만 적용되는지 여부, (ii) 조세혜택을 부여하는 국가에서 어떤 특정한 경제행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혜택이 제공되는지 여부, (iii) 다국적 기업의 이익발생지 결정 기준이 OECD에서 합의한 기준과 상이한지 여부 등을 고려할 계획







#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성공비결

## Factors behind Edinburgh festival's success

The Edinburgh International Festival(EIF) was held from August 9<sup>th</sup> to September 1<sup>st</sup>, 2013. This annual event allows Edinburgh - a small city of approximately 500,000 citizens - to attract 4 million tourists from 70 different countries every year and generate 300 million pounds in revenue. This figure is significant given that the Council of Edinburgh spends only 40 million pounds annually on culture-related services. With the establishment of this festival, Edinburgh has also gained enormous popularity on the international arena: it was chosen as the most popular city in the UK for 5 consecutive years since 1999; it was considered as Britain's 'top' city in Condé Nast Traveler in 2010; and it was also highly praised on 'Europe's Leading Destination 2012.' Despite the fact that many of EU festivals have suffered low turnouts in the aftermath of the fiscal crisis, Edinburgh has been consistently attracting more tourists for the following reasons: an active festival policy in support of city development, a premium-policy that ensures city's prestige, a flexible policy that embraces various performances, on top of which the EU also lends strong support.

###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경제·사회적 효과

축제는 본래 종교적 제의 혹은 피지배계급들의 한시적인 불만 해소 등 부차적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탄생했다. 그러나 최근에는 페스티벌 문화 자체의 창조적 생산성과 경제적 영향, 그리고 지역 재건과 통합 기능에 보다 주목하면서 페스티벌의 내연과 외연이 보다 다양해지고 풍부해졌다. 특히 유럽은 EU 차원에서 각 회원국의 다양한 페스티벌을 적극적으로 장려하고 지원하여 페스티벌의 현대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대표적인 경우가 지난 8월 9일부터 9월 1일까지 열린, 이제 자타공인 세계 최고의 페스티벌로 꼽히는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이다. 에든버러 페스티벌 기간 중에는 인구 50만 명도 되지 않는 작은 도시<sup>1</sup>에 해마다 전 세계 약 70개국에서 4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모여들어 약 3억 파운드의 돈을 지출하고 있다.<sup>2</sup> 에든버러 시의 한 해 문화 서비스 관련 예산 지출이 4,000만 파운드가 채 안 되는 것을 감안한다면<sup>3</sup> 이 페스티벌은 참으로 엄청난 수익성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BOP 컨설팅에 따르면, 2010년 에든버러 페스티벌로 인해 5,242개의 풀타임 일자리가

양산되었고 8월 한 달간 에든버러 전 숙박업소의 투숙률이 93%에 달했다. 또한 축제 참여자들이 숙박비로 지불한 금액이 4,100만 파운드, 카페와 바에서 지출한 금액이 3,700만 파운드에 이른다.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효과는 경제적 분야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먼저, 이 페스티벌로 인해 도시의 국제적 지명도가 엄청나게 올라갔다. 에든버러는 1999년 이후 5년 연속 영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도시로 선정되었고,<sup>4</sup> 2010년에는 콘테 나스 트래블러가 선정하는 영국의 최고 도시로 뽑혔다. 또한 세계인들 사이에서는 다섯 번째로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도시이자, 세계에서 열네 번째로 아름다운 도시, 열세 번째로 가장 활발한 문화도시, 열아홉 번째로 생활의 질이 좋은 도시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 결과 2012년 월드 트래블 어워즈에서 에든버러를 'Europe's Leading Destination 2012'로 선정하여 '유럽 여행은 에든버러로 통한다.'는 통념을 확인시켜 주었다.

아울러 에든버러 페스티벌은 대외적 효과 외에도 대내적 결속력과 내실을 공고히 하는 사회 통합적 기능도 톡톡히 하고 있다. 페스티벌에 참가한 1만 5,000명

<sup>1</sup> 2012년 기준 48만 2,640명

<sup>2</sup> 2010년의 경우 427만 2,228명이 참가하여 2억 4,500만 파운드를 지출

<sup>3</sup> 문화 및 관련 서비스 분야 지출 총액은 2009~2010년 3,790만 파운드, 2011~2012년 3,680만 파운드

<sup>4</sup> Guardian and Observer Reader's Travel Awards

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에든버러 페스티벌로 인해 스코틀랜드 전체 시민의 도시와 국가에 대한 자긍심과 가족애가 고양되고 교육을 비롯한 삶의 질도 개선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사회적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설문 대상	내용	동의 비중
지역주민	페스티벌이 에든버러에 대한 자긍심을 제고	89%
관객	페스티벌이 스코틀랜드 국가 이미지를 개선	89%
지역관광객	페스티벌 덕분에 가족과 보내는 시간이 증가	75%
교사	페스티벌이 아이들의 창의력 향상에 일조	69%
부모	페스티벌이 아이들의 복지를 향상	65%

자료: BOP Consulting (2011), Edinburgh Festivals Impact Study.

### 도시 발전을 전면에 내세운 에든버러 페스티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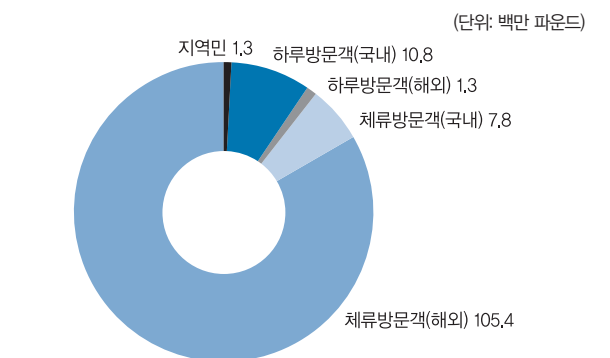
이와 같이 에든버러 페스티벌이 도시와 국가에 종합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우선, 태생적으로 이 페스티벌의 개념 자체가 기존의 자생적인 유럽의 페스티벌과는 달랐기 때문이다. 가까운 독일의 유명한 옥토버 페스트는 그 기원이 1810년 바이에른 왕실의 결혼 축하연에서 비롯되어 점차 본격적인 페스티벌로 발전해나갔다. 반면, 1947년에 탄생한 에든버러 페스티벌은 처음부터 '2차 세계대전의 폐허를 딛고 도시와 국가를 재건한다.'는 뚜렷한 목적의식하에 '전격 페스티벌'로 출발했다. 이후 이 페스티벌이 세계적인 명성을 얻는 데 성공하자 전 세계에서 이를 모방하는 페스티벌이 줄을 이었다. 현재 지구상에서 진행되는 약 1만 개의 축제 중에 국제적인 지명도를 가진 것은 약 절반 정도인데, 대부분이 1980년대부터 이른바 '페스티벌화(festivalisation)' 트렌드에 의해 자리를 잡았다. 이 축제들은 처음부터 대규모 문화적 경험의 창조와 소비 플랫폼으로서의 도시 기능을 전면에 내세워

도시 재건과 이미지 개선, 경제 부흥을 목표로 출범했다. 페스티벌이 단지 전통의 답습이나 유행, 소수 문화인들의 놀이장이 아니라 지역과 국가 단위의 발전 전략의 일부로서 그 기능과 의미가 확대된 것이다. 이에 따라 내용과 투자 수준에서 페스티벌 주최 도시들의 정책이 이전과 확연히 달라졌고 성공 사례가 쏟아져나오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이전보다 약 30% 정도 페스티벌의 수가 증가하였다. 페스티벌은 이제 하나의 상품 수준을 벗어나 도시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브랜드로 진화하였는데 몬트리올, 바르셀로나, 암스테르담, 싱가포르, 뮌헨 등의 페스티벌이 그 대표적인 예이며, 그 진원지가 바로 에든버러의 페스티벌이다.

### 세계 최고를 지향하는 페스티벌 정책

에든버러 페스티벌이 도시와 국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도 세계 최고의 문화 페스티벌이라는 인정을 받아 해외 관람객을 대규모로 유치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페스티벌의 프로그램이 전 세계 어느 페스티벌보다 내용이 뛰어나고, 수준이 높아 글로벌 문화애호가들이 자발적으로 에든버러로 모여들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주요 소비층은 스코틀랜드 내국인이 아니라 외국인 방문객이다. BOP 컨설팅에 따르면 2010년 에든버러 페스티벌 방문객 지출의 84%가 외국인이 소비한 것이었다.

### ★ 2010년 에든버러 페스티벌 관객 유형별 지출 분포



자료: BOP Consulting (2011), Edinburgh Festivals Impact Study.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운영자들은 일종의 프리미엄 원칙을 유지하기 위해 연중 전 세계를 돌며 아이디어를 구하고 최고 수준의 작품과 공연을 발굴하여 초청한다. 2013년 페스티벌에 아시아 박물관으로서 처음으로 한국의 백남준 아트센터의 작품이 초청된 것도 프리미엄 정책의 결과다.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조너선 밀스 총감독은 2012년에 한국에서 열린 백남준 탄생 80주기 기획전에 참가한 후 영감을 얻어 2013년 페스티벌 주제를 ‘아트 앤드 테크놀로지’로 정하고 백남준의 작품을 직접 전시하기로 결정했다.



자료: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EIF) 홈페이지; “한국 예술의 높아진 위상, 에든버러 페스티벌에서 확인하다.” (2013.5.1), 『메트로』.

주최 측의 이러한 노력으로 페스티벌에 참가하는 해외 관람객은 물론 공연자들까지 이 페스티벌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현대 공연물과 작품들을 접하게 되고, 대부분 재방문을 결심한다. 2010년 설문조사 결과,

#### ★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문화적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

설문 대상	내용	동의 비중
공연자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작품을 발견	88%
관객	반드시 봐야 할 공연을 감상	90%
관객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작품을 감상	92%
관객	새로운 재능, 스타일, 장르를 발견	80%
관객	페스티벌 참여 후 문화적 경험을 위한 보다 더 큰 리스크를 감수할 것을 결심	64%

자료: BOP Consulting (2011), Edinburgh Festivals Impact Stu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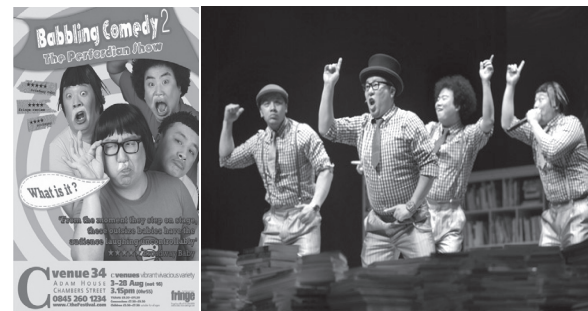
90%에 가까운 관객들과 공연자들이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작품, 반드시 꼭 봐야 할 작품을 감상했다고 응답했다.

#### 질서 · 자유, 중심 · 경계의 조화로 다양성을 확보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또 다른 성공비결은 프리미엄 원칙을 지키면서도 자칫 놓치기 쉬운 대중성과 흥미를 동시에 유지하는 것이다.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중요한 축인 국제 페스티벌<sup>5</sup>은 주로 공식적 예술, 클래식 작품들에 한정되어 자칫 대중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 한정된 장르로 인해 다양한 예술 공연의 창조적 에너지를 제한하여 공연 주체들뿐만 아니라 관객의 문화적 욕구가 채워지지 못한다면 다수의 불특정 대중이 참여하고 함께 즐겨야 하는 페스티벌 본연의 기능이 훼손될 수 있다. 에든버러 시는 이러한 국제 페스티벌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에든버러 프린지 페스티벌’을 페스티벌 원년부터 동시에 진행해왔다. ‘프린지(fringe)’는 주변이나 가장자리를 뜻하는 말로, 대중이 국제 페스티벌이라는 공식적인 무대에 올라가지 못한 작품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도록 전 도시를 공연자들에게 개방하는 것이다. 이는 1863년 프랑스 파리의 살롱전에 출품된 5,000점의 작품 중 낙선의 고배를 마셨던 4,000여 점의 작품들이 별도의 낙선전을 통해 본 전시보다 훨씬 더 큰 대중의 관심을 일으켜 결국 인상파 등장의 산파가 된 것을 연상시킨다. 에든버러 축제 기간 내내 길거리, 광장, 작은 카페와 주점 등 공간을 허락하는 도시의 모든 구석구석에서 전 세계에서 몰려든 공연자들이 좌판을 벌리고 자기의 실력을 맘껏 과시하며 관객과 함께 호흡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보통 약 3만 명의 공연자들이 2,000개가 넘는 공연을 펼친다. 실제로 지금은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주요 축인 국제 페스티벌

<sup>5</sup> 에든버러 페스티벌은 국제 페스티벌 외에도 프린지 페스티벌, 상상 페스티벌, 국제 영화 페스티벌, 재즈&블루스 페스티벌, 미술 페스티벌, 옐라 페스티벌, 군악대 페스티벌, 국제 서적 페스티벌, 스토리텔링 페스티벌, 호그마니 페스티벌 등 12개의 주요 페스티벌과 다수의 부차적 페스티벌로 구성

보다 프린지 페스티벌이 훨씬 많은 관중을 모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자체가 독자적으로 세계 최고의 페스티벌로 성장하였다. 이제 뉴욕을 비롯하여 세계 곳곳에서, 심지어 한국의 서울에서도 이를 모방한 프린지 페스티벌이 벌어지고 있을 정도다. 더욱 재미있는 것은 에든버러 페스티벌 운영자들이 프린지 페스티벌을 통해 다양성과 대중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한편, 이 프린지 페스티벌에도 평점제를 도입해 프리미엄 원칙을 견결히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평점제는 무질서한 프린지 페스티벌에 질서를 부여하는 동시에 페스티벌의 세계적인 수준을 유지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최고 평점인 별 5개를 받는 공연팀은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이제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초청받을 수 있게 되며 동시에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된다. 그 대표적인 예가 한국의 개그 그룹인 ‘용알스’다. ‘용알스’는 2010년에 이어 2011년까지 2년 연속 최고 평점인 별 5개를 받아 글로벌 스타로 부상했으며, 에든버러의 명성을 통해 거꾸로 한국에서도 유명세를 얻었다.



자료: “개그팀 용알스, 영국을 웃긴다.” (2011.8.24), 『연합뉴스』; “용알스, 세계를 간질이다.” (2012.1.1), 『시사인』.

프린지 페스티벌은 전 세계의 무명 공연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주는 동시에 국제 페스티벌과 함께 중심과 주변, 질서와 자유의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전체 에든버러 페스티벌을 더욱 풍성하게 하고 있다.

#### 유럽 차원의 페스티벌 지원도 한몫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성공 요인을 분석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전 유럽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지원이다. 가장 쉽게 눈에 띄는 예는 ‘유럽 페스티벌 협회(EFA)’의 결성이다. 에든버러 페스티벌이 시작되고 5년이 지난 1952년에 만들어진 EFA는 유럽에서 벌어지는 모든 축제의 우산 역할을 하고 있다. 창립 초기에는 산하에 겨우 15개의 페스티벌이 모였으나 지금은 총 44개국 100여 개의 페스티벌이 망라되어 상호 협력과 지원을 통해 상생의 자양분을 만들어내고 있다. 특히 2004년 5월부터는 ‘유럽 페스티벌 연구프로젝트’를 개시하여 유럽 각국의 페스티벌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학술적 연구 결과들을 내놓고 있다. 유럽의 페스티벌에 참여를 원하거나 혹은 유럽 페스티벌을 참고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EFA의 홈페이지를 열기만 하면 관련 연구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만약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관심이 있거나 참가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EFA의 홈페이지의 ‘페스티벌 맵’에서 에든버러를 클릭하거나 ‘페스티벌 캘린더’에서 에든버러 페스티벌을 클릭하면 된다. 곧바로 에든버러 페스티벌에 대한 소개 페이지가 뜨고 심지어 관련 동영상까지 감상할 수 있다. 또한 EFA는 유럽의 축제 문화를 고양시키기 위해 2010년부터 ‘유럽 페스티벌상(European Festival Awards)’을 만들어 매년 13개 분야에 걸쳐 최고의 페스티벌을 선정하여 시상하고 있다.



자료: 유럽 페스티벌 협회(EFA) 홈페이지



별도의 심사단 외에 인터넷을 통한 일반 대중들의 평가도 반영되어 그야말로 전 유럽인의 상이라고 할 수 있다. 2012년의 경우 무려 35만 명이 투표에 참여했고 그 평가 대상 페스티벌의 수도 200여개에 달했다.

페스티벌의 발전을 위한 유럽 차원에서의 이러한 공조체계는 EU 출범 이후 더욱 강화되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창의력을 유럽 경제의 새로운 원동력으로 규정한 EU 집행위원회는 2009년을 ‘창조와 혁신의 유럽인의 해(European Year of Creativity and Innovation)’로 지정하고 문화를 포함한 창의성 증진을 위해 회원국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했다. 곧이어 2010년 3월에 발표한 ‘Europe 2020’에서는 ‘문화적 다양성 확보와 창의적 문화산업 육성’을 주요 과제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진행될 예정인 창조적 유럽(Creative Europe) 프로그램에 18억 유로를 투자하여 문화, 음악, 공연예술, 문화유산 등 관련 산업 경쟁력 향상을 제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에든버러 페스티벌뿐 아니라 EU 각국의 페스티벌들이 이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이다.

####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장점은 한국에도 적용

2012년에는 EU 재정위기로 인해 유럽의 페스티벌들도 침체기를 맞이하면서 많은 대·소규모 페스티벌들이 취소되었다. 예를 들어, 소니스피어와 블록 2012가 연초에 취소되었고, 크림필드 뮤직 페스티벌도 마지막 날의 공연이 취소되었다. 그러나 에든버러 페스티벌은 여전히 호황을 누렸다. 프린지 페스티벌에는 180만 장의 티켓이 판매되었고, 279개 공연장에서 2만 2,457명의 공연자가 참가한 가운데 4만 2,096회의 공연과 2,695개의 쇼가 진행되었다. 8월 한 달 동안 페스티벌로 인한 경제적 효과는 2억 200만 파운드로 종전의 수준을 유지했다. 도시 발전을 위한 시당국의 전향적인 페스티벌 정책, 세계 최고의 수준을 유지하는 프리미엄 정책, 다양하고 대중적인 공연을 포용하는 탄력적인 정책에 EU 차원의 지원이 더해진 에든버러 페스티벌의

경쟁력이 위기의 순간에 한 번 더 위력을 발휘한 것이다. 그리고 이 상승세는 2013년까지 이어져 프린지 페스티벌의 공연장 수는 2012년보다 더 많은 379개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최근 등불축제를 둘러싼 서울시와 진주시의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한국의 페스티벌은 글로벌 프리미엄 경쟁에 나서기는커녕 자국 자치단체 간의 경쟁에 머물러 있고, 페스티벌 간의 협력과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EFA와 같은 상위조직체도 없는 실정이다. 페스티벌의 막대한 경제·사회·정치적 효과를 고려한다면 한국 정부와 지방자치 단체들도 영국의 작은 변방 도시에 든버러의 지혜와 축적된 경험을 적극적으로 참고해야 할 것이다. ★

이대식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EU의 글로벌 무역제한조치 평가

### Tenth report on potentially trade-restrictive measures

The tenth edition of the report on the monitoring of potentially trade-restrictive measures of the European Commission's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gives the latest state of play regarding trade measures which were introduced by the EU's partners between 1<sup>st</sup> May 2012 and 31<sup>st</sup> May 2013. The monitoring of such measures was initiated following the breakout of the financial and economic crisis in autumn 2008. It represents an important contribution to the global surveillance on free and fair trade and the monitoring of the G20 anti-protectionism commitment, and is a reflection of the EU's efforts to continuously enforce existing trade rules, in line with the agenda set out in the EU Communication on Trade, Growth and World Affairs. Between 1<sup>st</sup> May 2012 and 31<sup>st</sup> May 2013 154 new potentially trade-restrictive measures were adopted and only 18 measures were lifted. The total number of potentially trade-restrictive measures observed since October 2008 have largely grown to 688 and only 107 measures have been removed. In particular, emerging economies continued to apply the highest number of potentially trade-restrictive measures.

2013년 9월 2일 EU 집행위원회는 〈10차 잠재적 무역 제한조치 보고서〉를 발표하였다. 이 보고서는 EU 집행위원회가 글로벌 금융위기와 함께 확산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2008년 워싱턴 G20 정상회의부터 발간하기 시작했다. ‘보호무역조치 동결(Standstill)’에 대해 합의한 워싱턴 G20 정상회의부터 최근의 상트페테르부르크 G20 정상회의까지 무역장벽 철폐를 주요 의제로 다루는 등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 보고서는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 장벽이 여전히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EU 주요 31개 교역국의 잠재적 무역제한 조치(potentially trade-restrictive measures)에 대한 조사 결과를 담고 있다. 잠재적 무역제한 조치란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수입을 제한하는 등 무역 활성화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치들을 뜻한다. 조사가 시작된 2008년 10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총 688건이 무역 제한 조치로 분류되었고, 107건만이 해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차 보고서의 조사 기간인 2012년 5월부터 2013년 5월 사이에 154건이 발생했고, 불과 18건만이 해제되면서 보호주의 추세가 지속되고 있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54건 가운데 국경장벽은 44%인 67건, 국경 내 장벽은 38%인 59건, 국내 부양책 및 수출촉진 조치는 18%인 28건을 차지하고 있었다.<sup>1</sup>

#### ★ 주요국의 잠재적 무역제한조치 현황

국가	국경장벽	국경 내 장벽	공공조달	서비스 및 투자 장벽	수출 제한	수출 촉진	국내 부양책	총계 ('08.10월 ~ '13.6월)
아르헨티나	121	2	7	11	5	0	1	147
러시아	64	8	4	3	5	3	12	99
인도네시아	22	15	7	19	9	1	0	73
브라질	18	6	15	2	1	10	7	59
남아프리카 공화국	23	2	4	1	2	2	11	45
중국	1	7	7	7	1	1	12	36
인도	12	3	5	2	5	4	2	33
한국	0	0	0	2	0	7	15	24
터키	3	2	1	1	2	0	8	17
일본	0	1	0	1	0	1	7	10
미국	3	2	2	1	0	1	0	9
캐나다	0	1	2	0	0	0	3	6
호주	0	0	4	1	0	0	0	5
스위스	0	2	0	0	0	2	0	4
멕시코	0	0	0	0	0	0	2	2
그 외 국가	37	18	12	18	16	7	11	119
총계 ('08. 10월 ~ '13. 6월)	304	69	70	69	46	39	91	688
총계 ('12. 5월 ~ '13. 6월)	59	19	24	16	8	12	16	154

자료: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2013. 9.), Tenth Report On Potentially Trade-Restrictive Measures.

<sup>1</sup> 잠재적 무역제한조치에서 국경장벽은 수출제한, 국경 내 장벽은 공공조달과 서비스 및 투자 장벽을 포함







## 온라인 원격 강의 Online Remote Lecture

On September 13<sup>th</sup> 2013, an online remote lecture took place in Yonhee Hall at Yonsei University. The lecture was organised in cooperation with Keio University EU Centre and the Yonsei-SERI EU Centre. The lecture was on <Europe's Crisis of Multiculturalism; Causes, Trends and Prospects>. The lecturer was Professor Christian Joppke, Head of Department of Social Sciences, Chair in General Sociology, University of Bern. He discussed the issues of social integration and immigration in Europe. He also offered suggestions such as selective immigration, integration of education systems, and reducing discrimination.

지난 9월 13일, 연세대학교 연희관 401호에서 연세-SERI EU센터는 게이오대학교 EU센터와 공동으로 온라인 원격 강의를 진행했다. 베른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크리스티안 조프케 교수가 <유럽의 다문화주의 위기의 원인, 현황, 전망>을 주제로 강의했는데, 조프케 교수는 현재 유럽이 겪고 있는 이민자 문제를 설명한 후 사회 통합을 위한 방안으로 선택적 이민제도, 교육제도의 통합, 차별 금지를 위한 제도 마련 등을 제시하였다. 강연 이후 조프케 교수와 학생들이 열띤 토론을 펼쳤다.



## EU SME 포럼 EU SME Forum

On September 26<sup>th</sup> 2013, the EU SME Forum on <The Idea of European Integration> by Professor Hyun-chul Jung of Yonsei University department of philosophy took place in New Millenium Hall at Yonsei University. In his lecture, Professor Jung examined the founding roots of European integration by tracing the history of Europe, involving ideas on stoicism and Christianity. He drew upon the thoughts of Immanuel Kant and the idea of perpetual peace and universality, and those of Victor Hugo, who presented the idea of an integrated Europe.

지난 9월 26일, 연세대학교 새천년관 701호에서 EU SME 포럼이 진행되었다. <유럽 통합의 사상>이란 주제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정현철 연세대학교 철학과 교수가 발표를 맡았으며, 유럽 통합의 근원이 되는 사상을 유럽 역사 속에서 짚어내었다. 정현철 교수는 스토아주의와 기독교 사상부터 임마누엘 칸트의 영구적 평화와 보편성, 빅토르 위고가 추구해온 유럽 통합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으로 유럽 통합의 사상을 설명했다.



정책 도입이 외국기업에 불리한 시장 여건을 조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EU 집행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세계 경제의 점진적인 회복과 함께 국제 교역이 2013년에 3.1%, 2014년에 5.4%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동시에 신흥국을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잠재적 무역제한 조치는 이제 막 회복하기 시작한 세계 경제에 큰 위협이 되고 있음을 우려하면서, 보호주의 해소를 위한 국제공조를 다시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특히, 보호무역주의 성향이 심화되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가 큰 타격을 입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국 정부와 기업은 각국의 무역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자료: European Commission Directorate-General For Trade (2013. 9.), Tenth Report On Potentially Trade-Restrictive Measures.) ★

이서영 삼성경제연구소 리서치 애널리스트

특히 2008년 이후부터 최근까지 신흥국을 중심으로 잠재적 무역제한 조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 인도, 중국, 아르헨티나, 남아프리카, 브라질,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신흥 7개국에서 나타난 무역제한 조치는 전체 31개국 가운데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신흥국은 무역제한 조치를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산업화 계획의 일환으로서 활용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브라질, 러시아, 우크라이나는 국경장벽이 증가한 대표적인 국가들로 나타났는데, 2013년 1월에 아르헨티나와 우크라이나가 각각 100개의 세번(稅番, tariff line)과 131개 세번의 관세율을 인상한 바 있다. 또한 자국 산업의 성장 및 보호를 목표로 국경 내 장벽을 활용한 대표적 국가로는 브라질과 인도네시아가 있는데, 브라질은 2012년 10월부터 자국 자동차 제조업자의 공업세(IPI) 감면 혜택과 국산부품 의무사용 비율 준수 등을 포함하는 '이노바르-아우토(Inovar-Auto)'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도네시아는 자국 시장 상황에 따라 수출·수입의 제한 및 금지가 가능한 식품법, 산업법 등을 도입하였다.

한국은 서비스 및 투자 장벽 2건, 수출촉진 7건, 경기부양책 및 기타 조치 15건 등으로 총 24개의 잠재적 무역제한 조치가 도입된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3년 1월에 개정된 「유통산업 발전법(DIDA)」의 대형마트(SSMs) 출점 규제 및 영업시간 제한, 2013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국내기업의 해외 플랜트 및 조선 수주 시 보험과 금융지원 제도, 2009년 녹색성장위원회가 발표한 향후 5년간의 녹색성장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지원 제도, 2009년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향후 6년간의 국내 자동차 생산업체의 전기자동차 개발 지원 제도, 그 밖에 제약 및 바이오, 반도체, 제철, 신재생 에너지 산업의 R&D 투자 및 지원 제도, 중소기업(SMEs) 수출장려 정책 등이 있다. 보고서는 이와 같은 한국 산업과 수출을 지원하는





## 제20회 EU Core-Circle Society 세미나 The 20<sup>th</sup> EU Core-Circle Society Seminar

On September 27<sup>th</sup> 2013, the 20<sup>th</sup> EU Core-Circle Society Seminar was held in the conference room 510 at Samsung Economic Research Institute. Nam-sik In, professor of the Korea National Diplomatic Academy, gave a lecture regarding 〈Europe's Middle East Policy〉. He examined the history of European involvement and diplomacy in the Middle East since the 20<sup>th</sup> century to the present, explaining key events and issues defining the relations. Important agendas such as anti-terrorism, democratisation, immigration and refugee problems, as well as the deep rooted role of human networks between Europe and the Middle East were discussed in the lecture.

지난 9월 27일 삼성경제연구소 510호 회의실에서 제20회 EU Core-Circle Society 세미나가 개최되었다. 〈유럽의 對중동 외교정책 함의와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가 발표를 맡았다. 인남식 교수는 20세기부터 현재까지 전통적으로 중동지역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유럽 국가인 영국과 프랑스의 중동정책 변화 과정을 살펴봄에 유럽과 중동의 관계에 대해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었다. 발표 이후에는 국제 사회가 공유하는 중동 이슈인 아랍의 봄 이후의 민주주의 정착, 반테러리즘, 이민 사회 및 난민 유입 문제 등을 참석자들과 함께 활발히 논의하는 시간도 가졌다.

